

#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정기 학술대회

## 5·18과 정동·전환의 정치

| 일시 : 2024.9.20. 13:30 ~ 18:00

| 장소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

### -학술대회 순서-

13:30 ~ 13:40 : 등록

#### 1부 : 사회 차승기(조선대)

13:40 ~ 14:00 : 인사말 (총장, 원장, 재단측)

14:00 ~ 14:40 :

- 제1발표 : (정명중 : 전남대) : '다양체'로서의 '5·18'
- 토론 : 김형중(조선대)

14:40 ~ 15:20

- 제2발표 : (진태원 : 성공회대) : 다중 재난 시대의 5·18
- 토론 : 노영기(조선대)

휴식 : 15:20 ~ 15:40

#### 2부 : 사회 장은영(조선대)

15:40 ~ 16:20

- 제3발표 : (김미정 : 성균관대) : 광주와 '픽셔널 커먼즈'
- 토론 : 이소(광주대)

16:20 ~ 17:00

- 제4발표 : (송은지 : 중앙대) : '광주 비디오(들)'의 정동적 네트워크와 비디오 해적질 미학
- 토론 : 김지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휴식 : 17:00~17:20

17:20 ~ 18:00 종합토론

18:00 폐회

## <5.18과 정동·전환의 정치>

### 학술대회 일정

<b>1부</b>		사회 : 차승기(조선대)
축사 : 김춘성(조선대학교 총장)		
인사말 : 김형중(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장)		
인사말 : 박강배(5.18기념재단 상임이사)		
14:00 ~ 14:30	‘다양체’로서의 5.18	발표 : 정명중(전남대)
14:30 ~ 14:40		토론 : 김형중(조선대)
14:40 ~ 15:10	다중 재난 시대의 5.18	발표 : 진태원(성공회대)
15:10 ~ 15:20		토론 : 노영기(조선대)
15:20 ~ 15:40	중간휴식	
<b>2부</b>		사회 : 장은영(조선대)
16:00 ~ 16:30	‘자기’의 재구성과 ‘픽셔널 커먼즈’	발표 : 김미정(성균관대)
16:30 ~ 16:40		토론 : 이소(광주대)
16:40 ~ 17:10	‘광주 비디오(들)’의 정동적 네트워크와 비디오 해적질 미학	발표 : 송은지(중앙대)
17:10 ~ 17:20		토론 : 김지하(ACC)
17:20 ~ 17:30	중간휴식	
17:30 ~ 18:00	종합 토론	
18:00	폐회	

# 축사

김춘성(조선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총장 김춘성입니다.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과 5.18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정기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난히도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 여름을 되돌려 보면, 오늘 행사에서 발표를 맡아 주신 네 분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형중 민주평화연구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5.18기념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대학교는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해 예외적인 역사를 가진 대학입니다. 한국 최초의 민립대학이었다는 자부심 외에도 1.8항쟁을 통해 민주사학으로 거듭난 역사는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우리 대학 자체가 5.18 사적지일 뿐만 아니라 항쟁 당시 수많은 학생들이 음지와 양지에서 두루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을 주제로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치에 대해 국내 여러 유력한 연구자들이 모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 자리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오늘 이루어질 토론이 향후 5.18의 새로운 연구와 담론 형성에 커다란 족적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민주평화연구원과 5.18기념재단의 돈독한 우애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많은 연구 성과가 공유되고 누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양체’로서의 ‘5·18’

정명중(전남대)

## - 목차 -

1. 기세(氣勢)
2. 역량(puissance)
3. 합성(composition)
4. 혼종(hybrid)

“인간의 능력은 점차 기호, 기계, 기술, 텍스트, 물리적 환경, 동물, 식물, 폐기물과 같은 물질적 대상과 복합적으로 접속해야 생겨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은 비인간적 요소와 접속해야만 현실화되기 때문에 인간만의 특유한 능력을 따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  
- 존 어리(John Urry)

## 1. 기세(氣勢)

1980년 5월 19일, 광주 금남로 2가. 계엄군과 시위대의 공방전이 격렬하다. 이때 갑자기 한 청년이 근처의 교회 신축 공사장에서 드럼통 2개를 가져와 불을 붙여 군경 바리케이드 쪽으로 굴러 보낸다. 그 중 하나가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화염이 공중으로 치솟는다. “굉음과 환호성, 불길, 감격으로 시위대 후미까지 열기가 고조되면서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다.<sup>1)</sup>

같은 날. 군경의 두터운 방어벽 탓에 금남로 진입로가 모두 봉쇄된다. 그 무렵 공용터미널 위쪽의 소방서 사거리까지 밀린 시위군중 속에서 불현듯 한 여성이 확성기를 들고 나타나 처절한 목소리로 외쳐댄다. “나는 공산당도 아닙니다. 난동자도 아닙니다. (...) 계엄군을 물리치고 우리 스

1) 황석영·이재의·전용호 기록,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104쪽. (이하 이 책을 인용할 경우 ‘넘어’로 약칭하고 인용 쪽수만 표기하기로 함)

스로 광주를 지킵시다.” 그러자 삼시간에 그녀 주위로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이윽고 수천으로 불어난 군중은 다시금 시내 진출을 기도한다.<sup>2)</sup>

다소 생똥맞은 물음이지 싶다. 과연 이 두 개의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추측컨대 우리는 5·18 현장에서 술하게 발생했던 엇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리며 그저 심드렁해 할 수 있다. 아니면 ‘한 청년’ 또는 ‘한 여성’의 급작스러운 출현을 일종의 임계점(critical point)과 같은 것으로, 곧 하나의 사태가 다른 사태로 도약하는 계기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물론 다른 결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데 만약 들뢰즈(G. Deleuze)였다면 짐작컨대 위의 두 사건에서 ‘인간-드림통’ 또는 ‘인간-확성기’라는 연합신체의 특이한 배치(agencement)들을 발견했을 법하다.

들뢰즈에 의하면 세계가 구성되는 최소의 실재 단위는 언제나 배치이다.<sup>3)</sup> 이때 배치란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 “상이한 본성들, 즉 시대·성(性)·계(界)들을 가로질러” 그 요소들 간의 연결 및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치는 일종의 다양체(multiplicité)이다.<sup>4)</sup> 이러한 배치는 일정한 동질성을 전제하는 구조가 아니다. 배치의 유일한 통일성은 ‘공동작동’, ‘공감(공생)’, 곧 “동질적이지 않은 집합의 모든 요소들이 협동하게끔 만드는”<sup>5)</sup> 작동 방식에 있을 뿐이다.

한편 들뢰즈는 배치의 사례로 서양 중세의 기마병을 들곤 한다. 기마병은 ‘인간-말-등자(鎧子)’라는 배치의 결과물이다. 먼저 등자 덕분에 인간은 말과 안정적으로 연결접속된다. 나아가 말의 질주 속도를 발로 제어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손에 창을 들고 전투를 벌일 수 있다. 곧 등자가 “인간의 에너지를 동물의 역량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인간-동물의 공동작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곧 인간과 말이 새로운 관계의 문턱(liminal)에 진입함으로써 인간은 기사(騎士)로, 그리고 말은 전투의 도구로 각각 변용(affect)된다. 게다가 전장(戰場)은 새로운 유형의 변용들로 채워지고, 결국 전쟁의 새로운 배치가 출현한다.<sup>6)</sup>

이때 인간-말-등자라는 배치와 그것의 효과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마병이라는 연합신체의 본성은 그 배치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인간’, ‘말’, ‘등자’)로 환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맺는 관계(‘인간-말-등자’)와도 다르다.

베넷(J. Bennett)에 따르면 배치는 각각의 요소들이 지닌 고유의 벡터와 배치 자체의 벡터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특성을 갖는다. 배치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일시적으로 묶은 것, 즉 “그것들 내부에서 배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속적인 에너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능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연합이자 진동하는 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치는 “둔감하고 안정적인 덩어리”로서 유기체와 같은 게 아니다. 개방적이고 집단적인 “통일할 수 없는 힘”으로서만 작동한다. 결국 배치의 효과는 늘 창발적일 수밖에 없다. 베넷은 이를 “배치의 행위성”이라 정의한다.<sup>7)</sup>

2) 『넘어』, 112쪽.

3) 질 들뢰즈·클레르 파르네, 허희정·전승화 옮김, 『디אל로그』, 동문선, 2005. 102쪽.

4) 같은 책, 131쪽.

5) 같은 책, 102쪽.

6) 같은 책, 132쪽.

우선 배치의 행위성(agency)이라는 개념은 ‘인간예외주의’를 비껴간다. 곧 “사람, 동물, 인공물, 기술, 자연의 힘이 권력을 공유하고 서로 조화되지 않은 채 공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모든 인간주의(humanism)에 저항하는 것이다. 대신 배치의 효과가 생성되는 원천을 언제나 하나의 ‘무리(다양체)’로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의도조차 다른 수많은 사물들 또는 비인간들과의 경쟁이나 연합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른바 “분산된 행위성”<sup>8)</sup> 이론에 따르면 인간‘만’을 배치들 그리고 그 효과들의 근본원인으로 상정해야 할 필연성은 사라진다.

한편 배치의 행위성은 분산적이지 동시에 집합적이다. 베넷은 집합적 행위성의 예로 ‘기세(氣勢)’를 언급한 바 있다. 군사전략 용어인 기세는 인간적 계획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사물들의 특정한 배치로부터 역동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특이한 에너지의 흐름이자 그것이 발산한 분위기(Stimmung) 혹은 기미이다. 이 기세를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가의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 기세란 궁극적으로 시공간적인 배치로부터 발산하는 역동적 힘이기에 때문에 특수한 몇몇 요소들로부터 창발하는 것이 아니다.<sup>9)</sup>

앞서 두 개의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꽤 에둘러 온 셈이다. 아무튼 그 두 개의 사건을 특이한 배치들의 출현 그리고 그것의 행위성이나 효과(기세)라는 관점에서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를테면 인간-드림통(또는 인간-확성기)이라는 배치의 출현이 군중들의 환호와 감격, 열기와 같은 어떤 정념들의 흐름이나 집합적 분위기를 생성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물론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주체로서의 ‘인간(또는 그 관념)’을 툰-다운(tone-down)시키고 그 대신 인간-비인간(nohuman) 연합신체들의 출현과 그것들의 마주침(recontre)이라는 관점을 전경화(foregrounding)해서 5·18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볼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온갖 ‘인간들’이 등장한 만큼 술한 ‘사물들’<sup>10)</sup> 역시 출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물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게 타당한가. 이때 라투르(B. Latour)가 비인간을 사유하는 급진적인 방식, 곧 인간과 비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일반화된 대칭성(generalized symmetry)’의 시각이 필요하다.<sup>11)</sup> 이 대칭성의 관점에서는 비인간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행위자이다. 즉 인간이 다른 인간의 행위를 바꾸듯 비인간도 인간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들뢰즈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앞서 살펴 본 ‘인간’, ‘말’, ‘등자’는 각각 다른 신체들이

7) 제인 베넷, 문성재 옮김,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82~83쪽.

8) 같은 책, 99쪽.

9) 같은 책, 105쪽.

10) 참고삼아 당시 시위현장에 등장했거나 혹은 시위군중이 이용했던 사물들을 대략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스차, 각목, 검정색 천, 고속버스, 곡괭이, 공중전화박스, 광목 머리띠, 교통철책, 군용지프, 낫, 대형트럭, 대형화분, 돌, 드림통, 등사기, 리본, 마이크, 몽둥이, 무전기, 물수건, 물통, 방석모, 배터리, 보도블럭, 팔레방망이, 삽, 세숫대야, 쇠몽치, 쇠스랑, 수류탄, 스피커, 승용차, 실탄, 앰프, 연장, 연타집게, 유인물, 자갈, 장갑차, 전기, 전남대스쿨버스, 전화, 정류장 입간판, 즉창, 철근, 철모, 철조망, 최루탄, 치약, 카빈소총, 타이어튜브, 탄창, 태극기, 택시, 피이프, 페타이어, 하얀한복, 화염병, 확성기...

11)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인간·사물·동맹』(브뤼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엮음), 이음, 2010, 22쪽.

지만, 내재성의 평면(plan d'immanence)이라는 지평(또는 스피노자의 '신'이라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인) 안에서 보면 그것들은 모두 양태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그것들 사이에 위계나 우월성의 관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결국 특정한 배치와 그 효과의 '바깥'에 있는 예외적·초월적 요소로서의 인간을 상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글은 5·18항쟁의 현장에 출몰했던 무수한 사물들 중에서 '자동차(car)'를, 특히 이 도구(장치)와 연결접속된 다양한 배치들과 그 행위성을 탐구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스피노자(Spinoza)의 『에티카(Ethica)』를 경유해서 자신의 '신체론'을 개진하고 있는 들뢰즈의 사유에 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 2. 역량(puissance)

5·18 현장에서 온갖 종류의 차량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 차량이 가장 강렬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시점은 항쟁이 사흘째로 접어든 5월 20일이다. 공수부대의 만행에 분노한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2백여 대의 차량이 일제히 전조등을 켜 채 경적을 울리며 2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금남로로 돌진했던 날이다. 이날의 스펙터클한 차량시위는 “항쟁의 결정적 비약”<sup>12)</sup>을 낳은, 곧 항쟁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킨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한데 흥미로운 것은 이날을 제외하면 사실상 항쟁의 동선(또는 동력)과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였던 차량에 대한 언급이나 기록들이 대체적으로 어딘가 냉담한(alloof) 느낌이나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곧 차량은 그야말로 인간의 의도 여하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되는 그저[가치중립적인] 여러 탈것(vehicle)들 중의 하나이거나 부가적인 운송도구 정도로만 묘사되는 듯하다.<sup>13)</sup> 그러나 ‘인간-자동차’라는 연합신체<sup>14)</sup>의 출현 또는 새로운 용법(usage)의 창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들뢰즈의 신체론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들뢰즈에 의하면 신체를 그것의 형식, 기관들 또는 기능들에 따라 정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2) 『넘어』, 145쪽.

13) 베넷은 인간(혹은 인간의 의도나 반성)과 도구의 관계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관념을 기술철학자 스티글러(B. Stiegler)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다음처럼 뒤집어 놓는다. “인간은 의도를 스스로 정립하는 존재이며 행위 이후 자신의 행위로 부터 떨어져 그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존재로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조차도 인간의 의도적인 반성 역시 인간과 비인간 힘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베르나르 스티글러는 (...) 내면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 내면의 심리학적 지형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여주었다. 스티글러는 (원시)인간의 의식적인 반성이 석기를 이용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석기의 물질성이 과거의 필요성에 대한 외부의 기록으로서, 석기의 기능에 대한 ‘기록 보관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석기(석기의 질감, 색, 무게)는 석기를 이용하는 방식을 계획하도록 하고 다시 떠올리도록 유도하면서, 반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장소를 만들어냈다.”(제인 베넷, 앞의 책, 97~98쪽.)

14) 부기하자면 자동차 역시 그 자체로 여러 상이한 힘(질서)들의 결절 또는 절합(articulation)에 의해 구성된 연합신체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진술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 모든 사건에는 상이한 시기들이나 시간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 최신 **차량**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상 많은 상이한 시기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술적, 과학적 해법들이 축적된 결과이다. 어떤 부품은 수십 년 전, 다른 부품은 지난 세기, 그리고 바뀌는 신석기 시대로부터 온 것이다. 어떤 차가 현대적이며 동시대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그것이 설계되고 조립되고 판매되는 방식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아르네스 블록·코르벤 엘그르 엔센, 황상진 옮김, 『처음 읽는 부뤼노 라투르』, 사월의 책, 2017, 134쪽. 강조-원문)

다. 만약 신체를 단지 눈에 보이는 형태나 부분적 기능의 집적으로만 파악하면 신체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힘)들과 그것들의 교착[network]을 놓치게 된다. 가장 단순한 변용으로 이루어진 생물조차도 기관의 형태나 기관의 집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체에는 “기관보다 훨씬 미세한 입자” 그리고 “기능보다도 훨씬 불확정적인 운동”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들이 신체를 끊임없이(재)구성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촉발하기 때문이다.<sup>15)</sup>

대신 신체는 다른 신체들과의 마주침 그리고 그것이 지닌 변용시키거나 혹은 변용될 수 있는 역량(puissance)의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신체는 “대상화될 수 있고 이해 가능하고 제어할 수 있는 구조”<sup>16)</sup>로서의 유기체가 아니다. 우리는 신체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대신 언제나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스피노자)라고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물음으로부터 특정 동물이나 인간은 더 이상 종(種)과 속(屬) 또는 기관들, 기능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들뢰즈는 ‘역마(役馬)’와 ‘경주마’의 차이를 예로 든다. 곧 수레를 끄는 역마와 경주마의 차이는 노역을 하는 소와 말의 차이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경주마와 역마의 변용 능력은 본성상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변용 능력으로 보면 역마는 오히려 소에 더 가깝다.<sup>17)</sup> 이를테면 종(種)의 체계 또는 형태 분류학의 입장에서는 역마이건 경주마이건 그러한 구분은 부차적인 것이고 모두 그저 말[馬]일 뿐이다. 그러나 변용 능력이나 행위 역량의 측면에서 보면 역마와 경주마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신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제 5-18 현장에 출몰했던 인간-자동차 연합신체의 변용과 그 양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인간-자동차라는 연합신체에 관한 일종의 ‘행동학(ethology)’<sup>18)</sup>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다음 장면들을 우선 주목하도록 하자.

① 충장로 학생회관 정문 앞에서는 20~30명의 경찰들이 지프와 가스차 주위에서 긴장을 풀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곳을 급습해 퍼붓듯이 돌을 던지자 전투경찰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시위대는 경찰이 남기고 간 차량과 장비들을 모두 부숴버렸다. 가스차 의자 시트에 불을 붙이고 힘을 다해 차체를 옆으로 넘어뜨렸다. 불길과 연기가 치솟아 오르자 시위대는 환호성을 질렀다.<sup>19)</sup>

② 이날 밤 도청을 사수하던 계엄군을 심리적으로 가장 괴롭힌 것은 시위대를 독려하는 날카롭고도 애절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용달차에 매달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격렬하면서도 단호했다.

(...)

세무서 앞에서 시위대 진입을 막고 있다 가두방송을 들은 어느 공수대원은 이 목소리가 시민들에게는 슬픔과 울분, 분노 등을 온몸으로 느끼게 할 만큼 전율적이었다고 느꼈다. 계엄군의 심금마저 깊이 울리는 선무방송이었다.<sup>20)</sup>

15) 우노 구니이치, 이정우·김동선 옮김, 『들뢰즈, 유동의 철학』, 그린비, 2008. 63쪽.

16) 미레유 뷔맹, 안구·조현진 옮김, 『들뢰즈의 미학-사하라』, 산해, 2006. 52쪽.

17) 질 들뢰즈, 박기순 옮김,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1999. 115쪽.

18) 들뢰즈는 행동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행동학, 이것은 무엇보다도, 각 사물을 특징짓는 빠름과 느림의 관계들과, 변용시키고 변용하는 역량들에 대한 연구이다. 각 사물에 대해서, 이 관계들과 이 역량들의 범위, 극대와 극소의 문턱들, 고유한 변이들 혹은 전화(transformation)를 갖는다. 그것들은 세계 혹은 자연 속에서 그 사물에 상응하는 것, 즉 그 사물을 변용시키고 그 사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한다.”(질 들뢰즈, 앞의 책, 168쪽.)

19) 『넘어』, 68~69쪽.

③ 광주역의 3공수부대를 향한 시위대의 ‘무인차량’ 공격은 운전사가 트럭의 가속기에다가 돌이나 쇠못치 등 무거운 물건을 동여맨 다음 최대한 경계선에 가까이 차를 몰고 가서 운전대를 고정시킨 채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수대원을 향한 시위대의 차량 공격은 약 20~50회 정도 지속됐다. 시위대는 일부 차량을 운전사도 없이 시동만 걸어놓은 채 쇠못치 등 다른 도구로 가속기를 눌러 돌진시켰다. 무인 차량 공격은 공수대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sup>21)</sup>

①은 5월 18일,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궁지에 몰렸던 시위대가 역공을 펼쳐 전투경찰들을 패퇴시킨 후에 장비를 부수고 가스차를 불태우는 장면이다. 차량방화는 경찰의 강경진압에 분노한 군중의 항의 표시이다. 화염에 휩싸인 차량은 일종의 스펙터클이며, 군중이 집단적으로 연출한 퍼포먼스(혹은 해프닝)의 결과이다.

물론 격앙된 군중의 충동적인 행동을 예술행위로 포장할 이유는 딱히 없다. 다만 그들이 국가의 치안시스템에 귀속된 진압장치를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오브제(objet)로 뒤틀어버리는, 곧 탈맥락화(동시에 재맥락화)하는 탈구(dislocation)의 계기가 중요하다. 탈구는 우선 뼈와 같은 이음새[joint]를 분리·해체시킴을 뜻한다. 동시에 어떤 시스템(계획)을 혼란에 빠뜨려 그 시스템을 방해·교란시킨다는 뜻도 있다.(=disruption) 따라서 이 탈구의 체험이 집단적 쾌감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표현물(‘화염-자동차’)이 격렬한 정념(환호성)을 촉발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퍼포먼스는 이외에도 더 있다. 말 그대로 응징의 표시로 시위대는 광주 MBC방송국의 차고에 들어가 취재차량 2대를 포함해 8대의 차량을 끌어내 방화했다.<sup>22)</sup> 한편 경상도 출신 군인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한다는 소문에 동요한 군중은 경상남도 변호관을 달고 있는 대형트럭에 불을 지르고, 그 트럭을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몰고가서 정부의 선전 구호가 적힌 대형아치를 불사르기도 했다.<sup>23)</sup>

게다가 매우 충격적인데다가 너무도 비장한(아직도 여전히 불가사의로 남은) 형태의 퍼포먼스도 있었다.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시작된 이후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상의를 벗은 채 태극기를 흔드는 한 청년을 태운 장갑차가 도청 광장으로 돌진한다. 그 청년은 계엄군 저격수들의 집중 사격에 산화하고 만다. 그러나 목숨을 건 차량돌진은 이후 몇차례 더 이어졌다. 이 불가해한 퍼포먼스는 시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강렬한 이미지”로 남게 된다.<sup>24)</sup>

②는 이른바 가두방송단의 출현과 관련된 장면이다. 5월 20일, 금남로 일원에서 시위대와 공수부대의 일진일퇴가 거듭되는 와중에 시민들은 자발적인 모금으로 초보적인 형태의 방송장비를 갖추었다. 그 덕분에 한 사람은 스피커를 잡고 또 한 사람은 앰프를 들고, 나머지 사람은 마이크로 시

20) 『넘어』, 166쪽~168.

21) 『넘어』, 170쪽.

22) 『넘어』, 109쪽.

23) 『넘어』, 118쪽.

24) 『넘어』 203~204쪽.

위를 독려하는 형태, 곧 3명이 팀을 이루는 가두방송단이 탄생한다.<sup>25)</sup>

애초에 가두방송단은 도보로 선전·선동방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사람이 장비를 들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그때 누군가 차량 이용을 제안했고, 거기에 따라 차량에 방송장비를 부착한다. 기동성을 확보한 가두방송단은 자연스레 시위대의 전위(avant-garde) 노릇을 떠맡는다. 게다가 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 철야로 시내를 누비며 시위대를 격려할 수 있게 된다.<sup>26)</sup>

선전·선동의 목적은 사람들[mob]의 특정 감정을 자극하고 그것을 증폭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동원(mobilization)하고 그들의 집합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곧 익명의 군중을 일체감 안에서 행동하는 군중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당시 계엄군의 심금마저 울린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옥주와 차명숙이었다.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쉬지 않고 울려 퍼지는 그녀들의 애절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시민들의 쫓겨난 마음을 부추기는 한편 계엄군에게는 심리적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통해 발산되는 감정들(슬픔, 울분, 분노)에 전염(cotagion)되어 시민들은 물론 공수부대원들까지 전율케 했던 사태의 근저에 차량(혹은 모빌리티)이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③은 5월 20일, 군경 저지선의 돌파를 시도했던 대규모 차량시위가 많은 희생자들을 남긴 채 무위로 돌아가자 시위대가 차량을 공격용 무기로 전환하는 장면이다. 운전자가 차량 가속기의 페달을 돌이나 쇠망치 같은 무거운 물건으로 누른 다음 운전대를 고정해 채 저지선을 향해 질주하다가 저지선 바로 앞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이 무인차량 공격이다.

조금 다른 방식도 있다. 이를테면 광주역 앞에서 한 청년은 트럭에다 드럼통 2개를 싣고 휘발유를 가득 채워서 불을 붙인 후 차를 몰고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다가 저지선 바로 앞에서 뛰어내린다. “트럭은 그대로 불덩이가 된 채 돌진하여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광장의 분수대를 들이받은 후 “휘발유 드럼통이 폭발해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는다.<sup>27)</sup>

물론 무인차량 공격이 시위대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계엄군에게 실제적인 타격을 준 것은 아니었다. 차량이 목표지점까지 가닿지 못한 채 중간에 멈춰버리곤 했던 탓이다. 그래서 때로는 계엄군에게 붙잡히거나 죽을 각오로 중간에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돌진하는 이른바 유인차량 공격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차량 공격은 계엄군에게 상당한 심리적 중압감과 공포를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가 계엄군을 공격하는 반전이 일어난 결정적 계기였다. 기세의 흐름이 바뀌고 분위기(기미)가 달라진 것이다.

지금껏 살펴본 장면 ①~③에는 공통적으로 인간도 등장하지만 각종 차량도 등장한다. 한데 이 장면들을 두고 만약 행위주체로서 인간이 자신의 의지나 의도에 따라 사물인 자동차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읽어버리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대신 인간과 자동차 사이의 다양한 협동의 방식, 곧 공동작동의 양상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동작동의 양태를 그 이해의 편의를 위해 구

25) 『넘어』, 143쪽.

26) 『넘어』, 168쪽.

27) 『넘어』, 173쪽.

별하여 가시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 인간-불-태극기-자동차
- ② : 인간-스피커-앰프-마이크-자동차
- ③ : 인간-돌(쇠망치)-드럼통-불-자동차

각 장면의 인간-자동차(그것을 포함한 다른 사물들과)의 배치는 서로 다른 것이다. 곧 그 각 각은 서로 구분되는 연합신체의 양태들이다. 들뢰즈와 가타리(F. Guattari)는 그들의 공저 『안티 오이디푸스』에서부터 여러 이질적인 힘들의 집합적 배치와 그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기계(machine)’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위 세 개의 연합신체와 그 양태를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해보도록 하자. 이를테면 ①은 일종의 ‘표현기계’, ②는 ‘전염기계’ 그리고 ③은 ‘전투기계’라고 명명(구분)할 수 있다.

이 기계들은 변용 능력 또는 행위 역량의 관점(“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결코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관건은 인간과 자동차가 어떠한 관계의 문턱에 진입했는가, 또는 그들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작동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일이다. 표현하기, 전염시키기 그리고 전투하기는 인간-자동차의 다른 공동작동 방식들이다.

이때 각각의 자동차는 차량 ‘일반’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게다가 가스차, 용달차, 트럭 등 차량의 ‘개별’ 종을 언급하는 일도 무의미하다. 각 자동차는 각기 다른 사회적 환경(milieu) 속에서 ‘표현하는’, ‘전염시키는’ 또는 ‘전투하는’ 신체들을 합성하는 단독적(singular) 요소(힘)나 질서로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더불어 특이한 배치들 속에서 인간은 이를테면 연기자(performer)로 또는 선동가(agitator)나 전사(warrior)로 각각 변용된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자동차라는 연합신체 속에서 인간의 연기자-되기(devenir), 선동가-되기, 전사-되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발적인 의지나 반성에 의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태를 일면적으로 보는 것이며, 나아가 인간예외주의를 어쨌든 고집하는 일임은 분명하다.

### 3. 합성(composition)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항쟁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조직은 무장시민군 그리고 YWCA선전홍보팀이다. 특히 무장시민군과 그 조직에 대한 연구가 꽤 있어왔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조직을 설명하는 거의 보편화된 방식, 곧 항쟁 과정에서 즉자적·분산적(또는 자연발생적)인 것에서 체계적(또는 목적의식적)인 것으로 발전했다는 식의 진화론적 해석<sup>28)</sup>을 잠정 괄호치고자 한다. 그

28) 대표적으로 안중철, 「광주민중화운동과 무장투쟁」, 『한국동북아논총』 제20집, 한국동북아학회, 2001, 최정기, 『5·18민

대신 두 조직을 이질적인 신체들의 합성(composition)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무리 단일해 보이는 원시적인 신체조차도 상이한 힘과 질서에 속하는 부분(물질)들의 합성(해체)에 의해 구성(파괴)된다. 원리상 모든 신체는 연합신체이다. 이를테면 신체는 일종의 모자이크 또는 패치워크(patchwork)이다. 따라서 신체의 각 부분들은 그 “신체를 특징짓는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 아래서만”<sup>29)</sup> 그 신체에 귀속된다.

연합신체는 자신의 행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균집하려는 복합적인 신체들”<sup>30)</sup>로 변한다. 이 복합적인 신체를 달리 다양체라고 한다. 그것은 ‘...이다/있다(est)’로 수렴되는 존재론의 기반 위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et)’의 연쇄 속에서 작동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그리고(A 그리고 B)는 특별한 관계나 접속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들의 길을 연결하는” 작동의 방식이다. 이 그리고의 연쇄는 다양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들이나 그 항들의 집합 그리고 존재(being)나 일자(一者) 혹은 전체(총체성)로 결정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바깥에서 질주하도록 만든다. 곧 “다양체는 오직 요소들, 집합들, 심지어는 그 관계들 과도 동일한 본성을 갖지 않는 그리고(ET) 속에” 있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관점에 따라 무장시민군과 선전홍보팀을 균질적인 실체로서 보는 대신 이질적이고 다양한 신체들이 마주치고 합성됨으로써 행위의 역량이 증가되는 연합신체로 묘사해보고자 한다. 즉 이 조직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덩어리(molar)로 간주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이른바 ‘그리고’의 연쇄로써 전사(轉寫, transcribe)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라는 모빌리티의 역량 또는 이동잠재력(motility)의 증폭이나 강화라는 방향에서 여러 신체들이 합성되는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무장시민군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등장한 것은 소위 해방기간 첫날인 5월 22일부터이다. 이날 광주공원에서 무장시민군 재편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가장 먼저 차량등록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일군의 청년들은 “근처 꽃집에서 흰 페인트와 붓을 빌려다가 차량 앞뒷면에 큼지막하게 등록번호를 써주면서, 운전기사의 신분증을 참조하여 수첩에다가 차량을 등록”한다. 그 결과 등록차량 번호별로 운행노선이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군의 업무(구호, 수송, 보급, 연락, 순찰, 전투 등)도 분장되었다.<sup>32)</sup> 사실상 등록차량을 중심에 놓고 무장시민군의 임무와 편제를 구성했던 셈이다.

같은 날 오후부터 시민군은 도청 본관의 서무과를 상황실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기동순찰대라는 조직이 등장한다. 상황실은 기동순찰대에게 “차량통행증과 시내 주유소의 유류를 보급 받는데 필요한 유류보급증, 상황실 출입증을 발부”<sup>33)</sup>했다. 세 종류의 문서가 기동순찰대의 지

중항쟁에서 시민군의 조직화 활동, 『사회와 역사』 제135집, 한국사회사학회, 2022. 등.

29) 길 들뢰즈, 앞의 책, 52쪽.

30) 제인 베넷, 앞의 책, 80쪽.

31) 길 들뢰즈-클레르 파르네, 앞의 책, 110~111쪽.

32) 『넘어』, 275~276쪽.

33) 안중철, 앞의 글, 286쪽.

위와 위상을 보증하는 장치였다. 특히 유류보급증은 시민군의 임무 그리고 차량의 모빌리티를 지탱하는 동력원 공급시스템(주유소)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면에서 특권적인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시내 주유소마다 비축된 유류가 충분치”<sup>34)</sup> 않았던 탓이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치안 및 군사 업무의 수행과 계엄군 동태파악을 위해 도청상황실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네트워크를 반드시 구축해야 했다. 우선 기동순찰대는 외곽지역을 순회하다가 무전기를 통해 도청상황실과 정보를 주고받았다. 동시에 외곽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청상황실 전화 번호와 연락방법을 주지시킨 다음 그들이 수시로 계엄군의 동태를 파악해 알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오전 중에 차량이 외곽을 순회하고 나면 각 지역의 정보들이 도청상황실로 일괄 수합되었다. 통신네트워크와 차량의 모빌리티가 연동됨으로써 정보수집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도중에 활동을 중단하고 이탈하는 대원들이 생겨났다.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유, 근무시간, 교대, 식사 제공 등”이 원활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sup>35)</sup> 그러던 중 최후의 항전 하루 전날인 5월 26일, 시민군은 기동타격대라는 조직체계와 명령체통을 갖춘 본격적인 전투조직으로 재편된다.

우선 기동타격대의 지원자에게 가입선서를 받아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지역 명망가가 출범식에 참석하여 대원의 임무와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선서문 낭독과 같은 의례 장치를 도입해서 대원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고자 했다. 이때 선서문은 기동타격대 부대장인 이재호가 작성한 것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에서 건축사 일을 하다가 항쟁에 뛰어든 독특한 인물이다. 한편 그는 그의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체계를 설계하고 규율을 정하는 일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동타격대의 각 팀에게는 필수품인 차량(군용지프)과 무전기가 할당되었다. 이어 개중 성능이 가장 좋은 총과 수류탄이 보급되었다. 아울러 “복장도 좀더 의연하게 보이기 위해 전투경찰이나 군인들이 후퇴할 때 버리고 간 방석모, 철모로 모자를 통일시켰다.”<sup>36)</sup>

이와 같은 서술에서 드러나듯 무장시민군 조직은 언뜻 인간들의 연합 형태로만 보인다.(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해왔다!)<sup>37)</sup>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인간들만의 연합을 넘어서는 인간과 비인간적 요소들 간의 동맹(allince) 혹은 혼합(allige)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총을 든 시민군이라는 비교적 단일한 이미지나 표상(신화)으로 결코 회수되지 않을 어떤 과잉(surplus)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34) 『넘어』, 276쪽.

35) 『넘어』, 278쪽.

36) 『넘어』, 386쪽.

37) 이와 같은 시각에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이해)의 최대치는 아마도 시민군 조직에서 ‘의리(혹은 우정)의 공동체’와 같은 것을 읽어내는 일일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대표적이지 싶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변치 않는 유일한 관계는 친구였고 시민군들은 친구 관계를 조직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없이 자신의 몸뚱이와 친구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기층 시민군들은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시민군으로 남아 있으려 했다.”(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2012, 248~249쪽.)

이러한 차량, 총기, 무전기와 같은 사물들 뿐만 아니라 문서들(증명서, 선서문), 기술들(총기 조작법, 조직설계에 활용된 공학적 지식), 에토스(ethos)와 의례, 상징들(태극기, 방석모), 비교적 거대한 시스템들(주유소, 통신네트워크) 등과의 연합[인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자동차]이, 아울러 그것들 사이의 협동과 공동작동이 있다.<sup>38)</sup> 이것이 무장시민군을 유기적인 덩어리와 같은 실체로 간주하는 대신 여러 이질적인 신체들의 합성에 의해 구성된 다양체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5월 20일부터 외부와 단절된 광주에는 신문조차 들어올 수 없었다. 이때부터 각종 유인물이 언론을 대신한다. 들불야학, 백제야학 그리고 극회광대 등이 수동식 등사기를 이용하여 급히 소식지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애초 유인물 제작·배포 작업은 각 팀별로 4~6명 정도의 소규모 형태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민궐기대회가 개최되는 23일을 기점으로 여러 조직이 모여 YWCA를 근거지로 선전홍보팀을 꾸리게 된다. 이들은 궐기대회 진행, 대자보작성, 가두방송, 『투사회보』 제작 등을 총괄했다.

그 결과 유인물 작업도 『투사회보』 제작으로 일원화되었다. 게다가 초기 유인물 제작수량이 회당 500장에서 2,000장 정도에 머물렀던 데 비해 선전홍보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투사회보』 제작 수량이 만 단위로 확대되었다.<sup>39)</sup> 이러한 제작 혁신이 가능했던 궁극적인 원인은 기존의 수동식 등사기 이외에 YWCA에서 사용하던 ‘타이프용 등사기’ 그리고 소설가 황석영이 당시 가지고 있던 ‘고속등사기’까지 동원된 덕분이었다.<sup>40)</sup> 게다가 선전홍보팀은 차량을 이용하여 배포지역을 기존 동 단위나 특정지역을 넘어 광주 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5월 23일 오후 3시에 도청 앞 광장에서 제1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시민들에게 대회 개최를 알리고 그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하는 일이었다. 이때 윤상원이 “전남대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며 가두방송을 하면 시민들로부터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sup>41)</sup> 곧 ‘대학생’이라는 에토스(신뢰자본)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파토스를 자극해보자는 꽤 영리한 선전·선동 전략이었다. 물론 전남대 스쿨버스는 그러한 에토스의 구현체이다.

윤상원의 제안에 따라 김상집 등 10명이 승합차를 몰고 전남대로 향했다. 우여곡절 끝에 버스를 확보했지만, 정작 차량 열쇠가 없다. 그러자 김상집은 “군대에서 익힌 기술로 시동을 걸어” 차를 끌고 나오는 한편 광주고등학교의 방송실 장비를 차량에 설치했다.<sup>42)</sup>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8) 만약 미셸 칼롱(M. Callon)이었다면 이러한 사태를 다양한 요소들(인간과 비인간)이 일시적인 안정과 질서를 생성해 내는 ‘번역(translation)’의 과정으로 설명했을 것이다.(미셸 칼롱, 『번역의 사회학의 몇가지 요소들: 가리비와 생르비의 만(灣)의 어부들 길들이기』, 심하나·홍성욱 옮김, 『인간·사물·동맹』(브뤼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역) 참조.)

39) 김태중, 「5·18시기 민중언론의 생산맥락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4호, 전남대 5·18연구소, 2019, 34~35쪽.

40) 『넘어』, 359쪽.

41) 『넘어』, 313쪽.

42) 『넘어』, 313쪽.

는 전남대 스쿨버스는 ‘자동차’ 그리고 그것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김상집의 ‘기술’이다. 혹은 그 두 요소(힘)의 합성이다. 그날 범시민결기대회에 무려 1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한편 선전이나 홍보의 관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소스(source) 곧, 새로운 정보나 정보 제공자의 확보에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선전홍보팀에서 주로 대자보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극희광대 회원 김정희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자.

당시 YWCA는 이름 모를 아주머니 몇 분이 뜰 안쪽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주었는데 무장시민군들이 자주 들러 밥을 먹으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초기엔 차량을 타고 시내 경비를 담당한 순찰대가 그 일을 했지만 25일 이후 기동타격대가 편성된 이후론 기동타격대가 그 일을 맡아보았다. 직접 와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속보 같은 경우는 무전기를 통해서 전했다.

나는 대자보를 쓸 때 정확한 정보가 적어 애를 먹기도 했다. 내용이 틀리다고 항의가 들어와 문안을 고치고 붙여놓은 대자보를 뜯으러 간 적도 있었다. 신문, 방송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새소식에 목말라 했다. 사람들이 속보를 기다리는데 기동타격대들이 뉴스를 가져오지 않을 때면 가슴이 바짝바짝 땀났다.<sup>43)</sup>

선전홍보팀의 소스원은 무장시민군이다. 대자보라는 이 선전물(혹은 표현물)이 무장시민군의 모빌리티 또는 이동잠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의존의 증거는 바로 증언자인 그녀가 경험했던 ‘가슴이 바짝바짝 타는’ 어떤 조바심이나 불안이라는 정념이지 않을까? 하여간 위의 증언에서 우리는 선전홍보팀이라는 연합신체(전염기계)와 무장시민군이라는 연합신체(전투기계) 사이의 동맹과 공동작동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극희 광대, 들불야학, 백제야학 등 유인물팀이나 YWCA선전홍보팀 구성원들이 “서클, 동문, 선후배, 친구 등의 인적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들을 엮는 중요한 끈이 “전남대 학생운동 출신”이었다는 사실<sup>44)</sup>을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앞서 언급한 무장시민군을 설명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선전홍보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선전홍보팀 역시 하나의 다양체이다. 곧 인간들의 연합(인적관계)만으로는 그 경계와 실루엣을 확정할 수 없을 인간과 비인간(등사기, 자동차, 기술 등)의 동맹 그리고 다른 다양체들과의 합성에 의해 구성된 연합신체이기 때문이다. 한편 선전홍보팀과 무장시민군의 공동작동을 가능하게 했던 연결고리가 ‘인간-가마솥’이라는 연합신체(밥을 지어 시민군을 먹였던 무명의 아주머니들!)였다는 사실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다.

#### 4. 혼종(hybrid)

지금까지 이 글은 5·18 현장에 출현했던 인간-자동차의 배치(연합신체)들과 그 행위성에 대해 그 신체들의 역량과 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들뢰즈의 신체론에 기대어 탐구해 보았다. 우선

43)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광주오월민중항쟁사자료집』, 풀빛, 1990, 882쪽.

44) 김태중, 앞의 글, 32쪽.

이러한 시도가 이론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정합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글이 5·18에 대한 해석적 전통(관습) 안에서 어떠한 지평과 연결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정치적)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은 장담하지 못한다.

다만 이 글은 사건으로서의 5·18을 인간주의라는 낡고 오래된 테두리[habitus]를 벗어던지고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식의 도발적인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고백하건대, 그러한 불경스러운(?) 심리를 부추긴 것은 사회학자 어리(J. Urry)의 다음과 같은 언급 탓도 크다.

(...) 여러 이론가는 개인이 사회를 만들고 동시에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는 변증법적 명제를 구축하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그러한 변증법은 사회를 왜소화한 경우에만, 즉 비인간적인 것과 얽히고설킨 관계의 네트워크에서 순수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출해냈을 때만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사회적 실체는 인간과 다른 구성 요소의 관계 속에서 출현하며 인간만의 사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는 필연적으로 하이브리드이다.<sup>45)</sup>

“사회는 필연적으로 하이브리드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사회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의 이중적 네트워크다!” 아무튼 <인간·개인·주체>라는 지독한 편집증적 세트를 폐기하고 5·18을 인간-비인간 하이브리드(다양체)의 출현과 마주침으로 더불어 그 힘들(우글거림)의 길항과 교착으로 묘사해보는 일은 터무니 없는 짓일까?

---

45) 존 어리, 윤여일 옮김,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휴머니스트, 2018, 33쪽.

## 「‘다양체’로서의 5·18」에 대한 토론문

김형중(조선대)

정명중 선생님의 발표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들뢰즈의 신체 이론, 그리고 제인 베넷과 브뤼노 라투르 등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른바 ANT)을 통해, 5.18 당시 어떤 방식(배치)으로 ‘인간-비인간 연합신체’ 등이 출현하고 창발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이유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사료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주 텍스트 삼고, ‘자동차’라는 ‘사물’에 초점을 맞춰 ‘인간-비인간 연합체’가 등장(발생, 창발)하는 ‘배치’의 사례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가는 발표문의 논리 전개가, 평소 ANT나 ‘신유물론’을 ‘자본주의적 등가교환 논리가 완성된 시대의 뿌터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정도로 폄하해 오던 저같은 ‘비판이론’적 ‘상관주의자’마저 매혹당할 만큼, 명료하고 세심하게 읽혔습니다. 게다가 항쟁 기간 중 ‘자동차’와 관련된 적지 않은 에피소드들을 차례차례 누적적으로 소개해 가다가, 후반부에 “‘인간-불-태극기-자동차 연합체’ = 표현기계, ‘인간-스피커-앰프-마이크-자동차 연합체’ = 전염기계, ‘인간-돌(쇠망치)-드럼통-불-자동차 연합체’ = 전투기계”로 유형화하는 지점에서는, 기존 5.18 연구(발표자는 “<인간, 개인, 주체>라는 지독한 편집증적 세트”에 사로잡혀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와 완전히 결이 다른 ‘신유물론적 5.18 연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론적인 글이지만 어렵지 않게, 그러나 얼마간의 모험을 무릅쓰고 차근차근 설명을 보태가는 문장의 힘도 발표문을 재미있게 읽는 데 일조했던 듯합니다. 비록 평소의 제 입장과 상반되기는 하지만 자체 완결성을 갖춘 한 편의 훌륭한 글을 읽는 재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으로부터 더 많은 논의와 논쟁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토론자 본연의 임무(혹은 연기)이기도 할 터이니 몇 가지 상반된 입장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첫째로, 일련의 배치에 따른 인간-비인간 연합신체의 출현이 항상 긍정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령 발표자가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당연히 ‘비인간-시민 인간’ 연합신체, 말하자면 시민군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똑같은 논리가 (단일한 정체성으로 소환된 ‘계엄군’이 아닌) ‘M16-곤봉-군화-대검-군인 인간’ 연합체에도 적용 가능할 듯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탱크’와 M16과 대검은 알다시피 5.18당시 계엄군을 수식하는 ‘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창발의 우연성에는 어떤 윤리적 정치적 가치 판단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과묵한 저로서는 좀 의아합니다.

둘째로, 창발의 우연성이라고 했거니와 도대체 어떤 조건 하에서 당시의 시민군처럼 일종의 ‘과잉 상태’를 연출하는 연합신체들이 탄생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이미’ 인간-비인간 연합체입니다. 자동차-핸들-인간 연합체, 손가락-뱀-인간 연합체, 키보드-손가락-인간 연합체.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에서 우리는 창발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유지합니다. 86학번인 저도 물론 87년의 항쟁 기간 동안 금남로에서 ‘아, 이 순간 내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변했구나’ 싶은 어떤 연합 신체적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꼽으라면 그날 하루의 경험 뿐입니다. 만약 창발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각이 이토록 우연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다양체의 출현을 ‘기획’하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5.18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는 것일까요? 게다가 5.18이, 이후 이행기 정의 진행 과정 중(드물게라도) ‘보상금-당사자 인간-국가주의’ 연합체 같은 것을 출현시키기도 했음을 고려할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급진적 연합신체’는 (발표자께서 배제하려고 애쓰는 ‘주체의 의지’ 없이, 혹은 바디우의 ‘주체’에게 구성적인 ‘사건에 대한 충실성’ 없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 보존될 수 있는 것일까요? 들뢰즈 계열의 ANT 이론을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이전에 발표했던 한 글에서 저는 5.18 당시 남평 예비군 무기창에서 일어났던 일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문과 달리 저는 총을 탈취하려던 시민군들(물론 그들도 차량을 이용했습니다)의 머뭇거림에 주목했습니다. 총과 차량이 있었고, 시민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군들은 머뭇거림과 불안 속에서(국가에 대적할 수는 없다!), ‘총-차량-인간’ 연합신체로 변모하는 대신 총을 부숴버리고 맙니다. 사실상 사료들은 당시 총 앞에 선 시민들의 상당수가 동일한 반응을 보였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5월 27일 밤, 윤상원 등의 도청 사수파에게서만 어떤 새로운 연합신체의 출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출현에는 분명히 주체의 의지, 사건에 대한 충실성(우리가 죽어야 5.18은 사건이 된다)이 구성적이었습니다.

(이제 토론자 연기를 마치고) 일부러 어느 정도 과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이는 모두 논의를 좀 더 열띤 방향으로 진행해 보고 싶은 욕심이 더해진 탓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고백하지만, 진심으로 흥미롭고, 명료하고,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발표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다중 재난 시대의 5.18

진태원(성공회대)

## 머리말: 5.18의 소멸 가능성

1.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학술대회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내 생각에는 5.18의 장래를 사고해보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5.18과 관련하여 “정동·전환의 정치”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5.18을 사고하려는 목적을 품고 있을 것이기에). 5.18의 장래 내지 5.18의 미래. 평범해 보이는 이 문구는, 하지만 이미 그 자체로 꽤 복잡한 철학적 의미망을 거느리고 있다.

우선 이것은 5.18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5.18이 유한한 역사적 사실 내지 사물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5.18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지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한성을 지닌다. 5.18이여 영원하라 같은 문구는, 수사법적 차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5.18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자체로 품고 있다는 결론이 뒤따른다. 5.18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는 **5.18의 죽음 내지 소멸 가능성**이 유령처럼 깃들여 있다.

둘째, 따라서 5.18의 장래 내지 미래를 사고해보는 것은, 그것의 소멸 가능성을 전제할 경우에만 진지하게 또는 본래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5.18의 미래가 문제적이지 않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 5.18의 현재가 이미 문제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왜 5.18의 미래를 굳이 사고의 주제 내지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는가? 실제로 5.18의 소멸 가능성, 곧 5.18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내가 처음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만 제기하는 것도 아닐 터이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또는 30여 년 전부터, 어쩌면 5.18의 현장 그 당시에서부터 5.18의 소멸 가능성은 이미 5.18의 중심에 깃들여 있었다. 5.18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소멸 가능성은, 5.18의 존재 그 자체, 국가폭력에 맞선 항쟁으로서의 5.18의 물리적 존재 그 자체였다면, 30년 전 내지 20여 년 전부터 제기되는 소멸 가능성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의 5.18이 혹시 이제 진부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 또는 그것은 제도화되고 순치되고, 그리하여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맞선 민중의 목숨을 건 투쟁, 더욱이 대항폭력적인 투쟁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반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인 투쟁,<sup>1)</sup> 폭력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투쟁으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상실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의문을 담고 있는 것이었으리라.<sup>2)</sup>

2. 따라서 30년 전부터 5.18의 소멸 가능성 5.18의 가능한 죽음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5.18의 가치와 의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5.18의 상징적인 중요성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제도화되는 것의 이면**을 이루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몇몇 논자들이 말하듯 “5.18의 세계화”, 곧 아시아 민주주의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에서 5.18이 지닌 가치와 의의를 고양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었다.<sup>3)</sup> 그렇다면, 5.18의 소멸 가능성, 5.18의 죽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5.18은 자신의 소멸 가능성을 딛고 부활했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5.18은, 불화의 정신으로서, 불화의 힘으로서 5.18은 여전히 국가폭력과 부당한 압제, 차별, 배제에 맞선 불굴의 저항의 동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는가? 공식적인 제도화와 숭고화의 역설을 딛고 반역의 힘으로서 살아나고 있는가? 아마도 이 질문들에 대해 마냥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리라.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5.18의 국가제도화가 더욱 더 5.18을 순치하고 더욱이 5.18의 희생자와 그 ‘당사자들’, 특히 여성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제어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루어진 바 있고,<sup>4)</sup> 5.18이 상품화되고 물신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으며,<sup>5)</sup> 2021년~2023년 동안 발생한 일련의 용서와 화해의 시도가 과연 진정한 용서와 화해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sup>6)</sup>

3. 오늘 내가 ‘다중재난 시대’라는 화두를 배경으로 5.18을 사고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미 3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5.18의 죽음 또는 5.18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다른,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새로운 소멸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미래 내지 장래 자체의 소멸 가능성**, 따라서 **주체의 불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 다중재난이란 무엇인가?

### 1) 치안적 용어로서의 ‘복합위기’

---

1) ‘반폭력’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진태원 옮김, 난장, 2012를 참조하고, ‘비폭력’에 대해서는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21을 참조.

2)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에 수록된 여러 글 참조.

3) 안병욱, 『5.18의 의의와 역사적 평가』,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민중항쟁사』, 고령, 2001; 조지 카치아피카스, 『역사 속의 광주항쟁』,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 5.18민중항쟁의 의의』, 심미안, 2007.

4) 김영희, 『5·18 광장의 ‘애국’ 담론과 ‘여성’의 비가시화: 청취의 연대가 만들어내는 ‘여성’ 발화의 장소』, 『경제와 사회』 126호, 2021.

5) 박경섭, 「신성화와 상품화의 양상: 5·18민주광장의 사회문화적 생산과 공간의 통치」, 『비교문화연구』 27집 2호, 2021.

6) 박경섭, 『5·18과 용서의 지형학: 용서의 (불)가능성과 죄, 책임, 정의』, 『문학들』 2022년 여름호 및 2023년 11월 16일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16차 콜로키움 발표문 참조.

4. 우선 이 발표에서 ‘다중재난’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도입하여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핵심 어휘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몇 가지 인식론적 논의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

이 용어는 일차적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국내 언론과 정치권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복합위기’라는 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축하고 있다. 이 경우 복합위기라는 용어가 뜻하는 바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도 연쇄적인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여기에 더해 환율 인상, 금융 불안정,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부채 문제 등과 같은 다면적인 위험 요인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합위기’로 표현되는 이 문제들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치안(police)의 관점에서 이해된 위기일 뿐이다.’<sup>7)</sup> 치안에게는 기존 지배 질서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지배 계급의 이익 보장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모두 무차별적으로 위기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치안에게는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불안정도 위기이지만 민주화 시위도 위기이고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도 위기다. 지배 계급과 정권은 기존의 질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규범화하고, 이 질서를 훼손하거나 동요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탄압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안이 위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은 경우 진정한 위기들을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권에서 ‘복합위기’라고 부르는 것에는 인류세(anthropocene) 내지 자본세(capitalocene)라는 명칭으로 표현되는 생태적 재난이나 3년여의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보건 재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로 맞물려 있는 이러한 생태적·보건적 재난은 인류 문명의 토대 자체를 잠식하는 문명적 위기이며 민중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 복합위기론에서 이 문제는 방치되거나 배제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기만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자본 축적의 구실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래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세월호 참사 및 이태원 참사로 대표되는 사회적 재난들과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과 성적 소수자들, 장애인들, 이주자, 탈북민,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소자들이 직장에서, 일상에서 직면해 있는 불안전 재난도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여성가족부 해체’나 ‘노동조합 회계 감사’, ‘관제 애도’ 또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에피소드

7) 자크 랑시에르, 『불화: 정치와 철학』, 진태원 옮김, 도서출판 길, 2015.

에서 보듯 현 정권은 복합위기라는 구실 아래 약소자들을 탄압하거나 배제하는 데 주력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대해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공론장을 형성하기보다는 막무가내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더욱이 ‘복합위기’라는 용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2023년 7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변동과 그것이 특히 동아시아의 정세에 미칠 파장 역시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대개 ‘신냉전’으로 명명되고 있는 이러한 재편은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질서의 전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사이의 대결구도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냉전 반공주의에 불과한 ‘가치 동맹’의 기치 아래 전개하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은 이러한 대결을 조장·강화하고 있어서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은 점차 멀어지고 적대적인 대결 구도가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이는 다시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경로가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러한 재난들의 중심에는, 낸시 프레이저가 말하듯 ‘식인 자본주의’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sup>8)</sup> 오늘날의 식인 자본주의는 착취에 기반을 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제국적 생활양식’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인종적 수탈 및 구조적 불평등의 간극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sup>9)</sup> 이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산출함으로써 문명의 기초를 잠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입각하여 대중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대중들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대한 정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따라서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에서 주목해야 하는 진정한 위기는 치안이 명명하는 ‘복합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은폐하고 배제하는 다중적 재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재난들이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사실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들을 서로 연결된 다중적 재난들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어야 하는 민중들, 곧 을(乙)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사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배 세력이 ‘복합위기’나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같은 기만적인 프레임을 통해 다중재난의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그것을 오히려 새로운 이윤 획득의 기회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안적 프레임의 개발을 비롯한 **인식론적 투쟁**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다.

## 2) 다중위기의 인식론

8)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장석준 옮김, 서해문집, 2024.

9) 울리히 브란트·마르쿠스 비센, 『제국적 생활양식을 넘어서』, 이신철 옮김, 에코리브르, 2020.

10) 이광석, 『디지털 커먼즈』, 갈무리, 2021 중 1~2장 및 Etienne Balibar, “Sur la catastrophe informatique : une fin de l’historicité ?”, *Les temps qui restent*, no. 1., 20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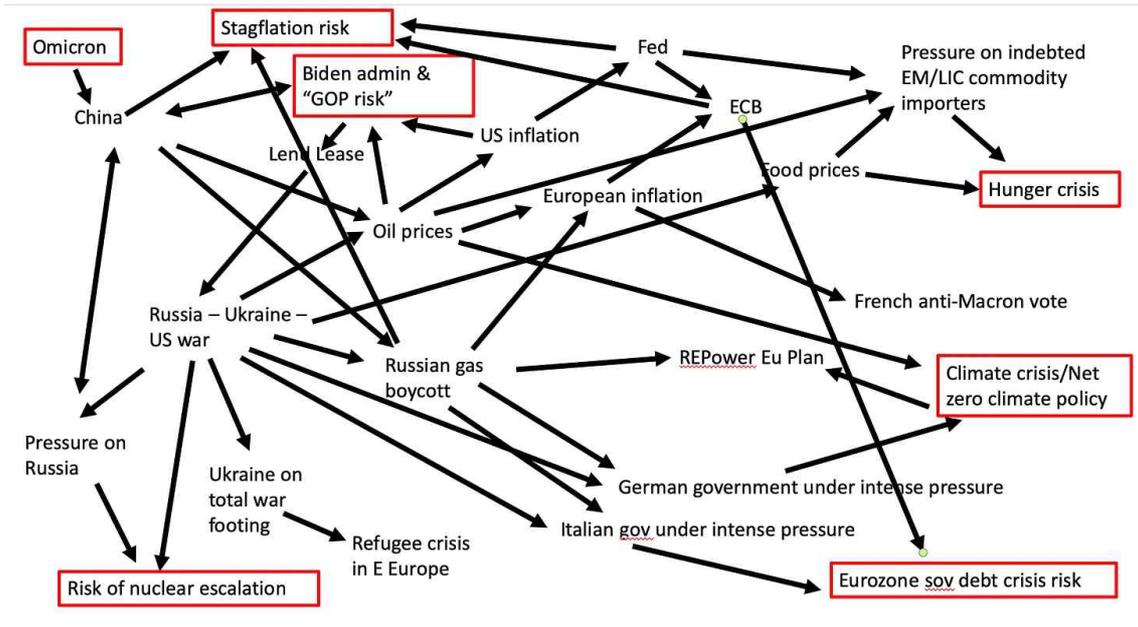
5.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 사회과학계에서는 복합위기 내지 다중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논의의 내용은 국내의 언론이나 정부에서 활용하는 다분히 치안적인 용법보다 더 정교하고 말 그대로 복합적인 논점을 표현하고 있다. 복합위기 내지 다중위기라는 표현은 원래 프랑스의 복잡성 이론가였던 에드가 모랭(Edgar Morin)이 처음 고안한 polycrisis라는 용어의 우리말 번역어에 해당하는 것이다.<sup>11)</sup>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이 용어는 2010년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었던 장-클로드 융커(Jan-Claude Juncker)가 당시 유럽연합이 직면해 있던 중첩된 위기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언론과 국제정치 무대에서 주목받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사가인 애덤 투즈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직면한 다중적이고 상호 연결된 위기들을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서구 사회과학계에서 활발한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sup>12)</sup> 그런데 투즈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투즈는 복합위기 내지 다중위기라는 용어의 서구식 사용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곧 융커의 용법은 일련의 위기들을 단지 병치시켜 놓았을 뿐 위기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11월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의 경우 (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취임 연설에서 하나로 수렴하거나 서로 중첩되는 네 가지 위기, 곧 범유행 감염병, 경제, 인종 간 정의, 기후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상”의 위기와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유아론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그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의 핵심 참모인 천이신이 다중적인 위협들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6대 효과”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은, 그 뒤 코로나 팬데믹 때 글로벌 정치가 직면하게 되는 다중위기의 특성을 선구적으로 해명한 탁월한 통찰이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여기서 6대 효과란, 1) 역풍 2) 수렴 3) 층화효과(layering effect) 4) 연결효과(linkage effect) 5) 확대효과(magnifier effect) 6) 유도효과를 가리킨다. 역풍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부로 이동함으로써 외부의 악영향이 중국 내부에 미칠 반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렴이란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것들로 보이지만 하나로 수렴하여 새로운 위험을 산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층화효과란, 여러 공동체에 속한 이익집단들의 요구가 중첩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고, 연결효과란 전 세계의 의사소통이 용이해지면서 산출될 수 있는 상호 연결 및 강화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확대효과는 작은 의견 하나가 순식간에 거대한 사회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을 가리키며, 유도효과란 한 지역의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모방과 동조를 통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투즈는 천이신이 제시한 6대 효

11) 에드가 모랭, 『지구는 우리의 조국』, 이재형 옮김, 문예출판사, 1996.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언론과 정부에서는 주로 ‘복합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 논의할 애덤 투즈의 저작에서는 ‘다중위기’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 용어도 언론 및 학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양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겠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복합위기’라는 용어가 반드시 정부의 행정언어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다음 저작에서는 ‘복합위기’라는 표현이 인류 문명이 처해 있는 다중적인 재난 상황을 가리키기 위한 비판적 용어로 쓰이고 있다. 박지형, 『재난문명』, 나남, 2022.

12) 애덤 투즈, 『섯다운』, 김부민 옮김, 아카넷, 2022.

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인류가 겪고 있는 다중위기를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  
 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투즈는 『셋다운』 출간 이후 온라인 상에서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  
 나-소련 전쟁으로 인해 더 복잡해진 다중위기의 모델을 “차트북”(Chartbook)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 다음 모델이 2022년 6월 제시된 차트북 #130의 다중위기 모델이다.<sup>13)</sup>



이 맵핑 모델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촉발하면서 일어난 다중적인 위기들, 스태그플레이션 리  
 스크,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리스크”, 석유가격 폭등, FED와 ECB의 연쇄적인 금리인상,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난민위기와 가스위기, 식량위기, 전면전으로의 확장 위기, 유로존  
 의 재정위기, 기후위기 정책 후퇴 위험 등이 서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확산되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sup>14)</sup>

하지만 이 맵핑 모델은 직관적인 조망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중위기를 개념적으로 규정하여  
 이론화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모델이다. 여기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글로벌 공중보건 위  
 기가 경제 및 정치위기로 확산되는 와중에 간접적으로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  
 른 일련의 연쇄적인 위기들을 촉발하는 과정에서 다시 유로존 재정위기나 핵전쟁위기, 또는 기후  
 위기 정책 후퇴 위험 등이 촉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 위기들의 인과작용의 특성을 개념  
 화하지 않고 있으며, ‘구조적 위기’ 내지 ‘시스템 리스크’ 등과 같은 기존의 잘 알려진 용어들과

13) <https://adamtooze.substack.com/p/chartbook-130-defining-polycrisis> (2024.9.10. 접속)

14) 또한 그는 “다중위기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신문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Adam Tooze, “Welcome to the world of the polycrisis”, *Financial Times*, 22 October, 2022. <https://www.ft.com/content/498398e7-11b1-494b-9cd3-6d669dc3de33> (2024.9.11. 접속)

비교해볼 때 다중위기라는 새로운 용어가 갖는 인식론적 비교 우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6. 하지만 투즈의 작업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그 이후 다중위기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교화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내 발표가 다중위기에 대한 상세한 인식론적 고찰을 주제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그 가운데 몇 가지 작업에만 한정해서 그 특성과 한계를 간단히 고찰해보겠다. 우선 2024년에 일련의 저명한 사회과학자, 재난연구자, 정책학자 등이 발표한 「글로벌 다중위기: 위기 중첩의 인과적 메커니즘」이라는 공동 논문은 다중위기를 개념화하려는 정교한 작업으로서 주목할 만하다.<sup>15)</sup> 이들은 글로벌 위기는 “하나 이상의 빠르게 움직이는 촉발 사건이 느리게 진행되는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글로벌 시스템을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 불안정하고 해로운 불균형 상태로 밀어낼 때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다중위기를 “다중적인(multiple) 글로벌 시스템에서 위기들이 인과적으로 중첩되어 인류의 전망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위기”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 동안 다수 사람들의 행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갑작스러운(비선형적인) 사건 내지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들에 따르면 이것은 고대적이거나 근대적인 위기 개념과 달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결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정상성과의 단절을 가리키거나 더 나아가 “시대적인 변화”(epochal changes)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직접적인 피해”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기 개념이 기존의 고대적, 근대적인 용법들에 비해 위기의 발생과 심각도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치안적인 목적(securitization)에 따라 마구잡이로 다양한 사건이나 작용들을 ‘위기’ 내지 ‘긴급사태’ 등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일을 비판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다중위기에서 ‘다중’(poly)이라는 접두어도 좀 더 정확히 규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들은 한편으로 시스템 리스크 이론에 의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시스템 리스크와 다른 다중위기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시스템 리스크 이론에 의지하는 측면은, 처음에는 시스템 내의 제한된 일부의 위기처럼 보였던 것이 시스템 전체의 기능에 장애(disturb)를 초래할 수 있는 혼란(disruption)으로 확산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인접한 다른 시스템(들)로 이러한 혼란이 전이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반면 양자의 차이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 리스크에서는 “잠재적 피해”(potential harm)가 강조되는 반면, 다중위기에서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들의 실현(또는 작동)”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전자가 하나 또는 두 개의 시스템만을 고려하는 반면 다중위기는 다중적인 시스템을 고려한다는 점이며, 세 번

---

15) M. Lawrence, T. Homer-Dixon, S. Janzwood, J. Rockström, O. Renn & J.F. Donges, “Global polycrisis: the causal mechanisms of crisis entanglement”, *Global Sustainability*, vol. 7, no. 6, 1-16, 2024.

째는 전자에서는 리스크 자체의 복잡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중위기에서는 리스크가 전개되는 시스템들의 복잡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중위기론의 강점을, 각각의 위기가 고립된 가운데 발생했을 경우 불러일으키는 피해보다 다중적인 위기들이 서로 결합되어 산출하는 피해가 대개 더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다중 위기가 “창발적인”(emergent) 현상이라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sup>16)</sup>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다중위기 가운데서도 “글로벌” 차원의 다중위기를 강조하지만, 지역적(local)이거나 전국적인 차원, 또는 역내적(regional)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행성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내적인 수준에서 다중위기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 있다.<sup>17)</sup>

### 3) 다중위기에서 다중재난으로

7. 다중위기 개념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존재론적이거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근대 서양 주류사회과학, 특히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지배해왔던 “존재론적 개체론”(ontological individualism) — 개별 가계와 기업을 유일한 경제의 행위자로 간주하는 — 에서 벗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상호 중첩적인 원인들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일뿐더러, 예측할 수 없는 창발적 효과의 발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18)</sup> 다중위기론의 시각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고 더욱이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던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비롯한 주류 사회과학의 한계는 단지 제도 자체의 리스크 내지 위기가 제도 내의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들 내지 시스템들이 독립된 개체들처럼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가정에서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각각의 제도 내지 시스템은 다른 제도 및 시스템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는 상호 영향 속에서 실존하고 작동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현재 진행되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위기들의 상호 중첩된 현상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미증유의 것**이라는 점, 적어도 새로운 **질적 단절**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다중위기론을 주도하는 일련의 연구자들은 다중위기라는 용어가 단지 “여

---

16) 공동 필자 중 일부는 다른 논문에서도 시스템 리스크 이론과 다중위기론의 연관성과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극단적 복잡성, 고도의 비선형성, 초국경적 인과성, 심층적 불확실성”이라는 네 가지 공통점이 지적되면서 동시에 다중 위기에서는 리스크들 사이의 “인과적 동시발생”(synchronization)이 강조되고 있다. S. Jantzwood and T. Homer-Dixon, ‘What is a global polycrisis? And how is it different from a systemic risk?’, *Cascade Institute*, 2022; <https://cascade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22/04/Whatis-a-global-polycrisis-version-1.1-27April2022.pdf> (2024.9.11. 접속)

17) 예컨대 S. Dinan, D. Béland, & M. Howlett, “How useful is the concept of polycrisis? Lessons from the Development of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olicy Design and Practice*, 2024 참조.

18) Michael Jacobs, “After Neoliberalism: Economic Theory and Policy in the Polycrisis”, *The Political Quarterly*, 2024.

러 가지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고 그것들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데 불과하며, 이런 불운한 사례는 과거에도 슬하계 존재했다는 반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비판을 제시한다.<sup>19)</sup> 곧 실제로 1970년대의 오일쇼크 같은 사건은 경제적 위기와 에너지 위기 및 지정학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중첩되어 발생한 사건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다중위기는 이런 과거 사례들에 비해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다중위기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생태계 위기, 코로나 팬데믹에서 드러난 공중보건 위기(인수공통감염병을 중심으로 하는), 원자재 및 금융의 불안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 그리고 소련-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표출된 지정학적 충격, 이데올로기적 극단주의 및 이주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효과를 산출하는 위기인 것이다. 아울러 더 중요한 문제는 다중적인 시스템에서 발현되는 위기들의 동시 발생 및 동조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해로운 효과들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역으로 광범위한 시스템 리스크의 동조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중위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현재 가중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고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8.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합위기’라는 노골적인 치안적인 용어법뿐만 아니라 ‘다중위기’론 역시 뚜렷한 인식론적·실천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중위기론을 개념화하는 연구자들의 사회과학적·시스템이론적 시각에 비춰보면 나 자신의 관점은 조금 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지만, 다중위기와 다중재난 사이의 몇 가지 차이점을 제시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첫째, 내가 다중위기 대신 다중재난이라는 개념을 선호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위기’라는 용어가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사건**, 곧 매우 개연적인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해악과 피해를 함축하는 데 비해, ‘재난’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사건이 **이미 도래했고 진행 중에 있음**을 지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중위기라는 것이 진정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이러한 위기들의 복합체가 아무리 위중하고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것들과 떨어져서 측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거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다. 다중위기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논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위기들이 현재 작동 중에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위기라는 개념을 “직접적 피해”를 함축하는 것으로 재개념화하고 더 나아가 **“잠재적 피해”**를 넘어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들의 실현 realization(또는 작동activation)”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

---

19) Thomas Homer-Dixon, Michael Lawrence & Scott Janzwood, “Dismissing the Term ‘Polycrisis’ has One Inevitable Consequence: Reality Always Bites”, *The Globe and Mail*, 18 February 2023. <https://www.theglobeandmail.com/opinion/article-dismissing-the-term-polycrisis-has-one-inevitable-consequence-reality/> (2024.9.11. 접속)

들은 위기를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의 사건 내지 일련의 사건들로 한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연쇄들의 실현 역시 이러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포착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예컨대 롭 닉슨이 “느린 폭력”이라고 부른 구조적 인과성, 곧 단기적인 경험적 분석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식민주의적 폭력이나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구조적 폭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기 어렵다.<sup>20)</sup> 마찬가지로 아이리스 매리언 영이 “구조적 부정의”라고 부른 것 역시 다중위기론으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sup>21)</sup>

둘째, 이런 한계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중위기론을 제창하는 이들은 대개의 경우 다중위기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정치적 위기 또는 정치적 재난을 고려하지 않는다. 생태계 위기나 공중보건 위기, 또는 경제 위기나 이주 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위기들의 동시 발생 및 동조화를 강조할 경우에도 정치적 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들이 위기라는 것을 본성상 객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곧 비록 다중위기가 단일한 위기나 심지어 두 개의 시스템에서 연동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들과 달리 다수의 시스템에서 동시발생하며 상호 영향을 미침으로써 창발적인 효과, 곧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위기들을 산출하는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이 산출하는 해로운 효과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인 영역**이, 다중위기가 발생하는 영역과 독립적으로 항상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그것이 단일한 정부가 되었든 아니면 기후위기에서 보듯 정부간 협의체가 되었든 또는 흔히 G8 내지 이제는 G7으로 불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되었든 간에, 다중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주체 내지 글로벌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중위기 개념의 암묵적인 전제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중위기를 촉발하고 그것이 가속화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사실 **주체적인 것 자체의 재난**에서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중위기는 랑시에르적인 의미에서 치안적인 개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여기서 내가 “주체적인 것의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체성, 특히 정치적 주체성이 처해 있는 이율배반 내지 이중구속의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중위기 내지 다중재난에 직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능동적 주체성이 요구되는 반면 능동적 주체가 형성되고 실행될 수 있는 조건들은 더욱 더 와해되거나 잠식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리고 능동적 주체성의 형성과 실행이 더욱 어려워질수록 다중재난은 더욱 심화되고 촉진되며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시 그것은 또한 전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것 자체의 재난이야말로 다중재난들 전체를 (루이 알튀세르의 용어법을 원용한다면) **과잉결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체적인 것의 재난이라는 문제가 배제되거나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야말로 다중위기론의 이론적 한계의 핵심을 이룬다고 말할

20) 롭 닉슨,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김홍욱 옮김, 에코리브르, 2020.

21) 아이리스 매리언 영,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허라금 외 옮김, 이화여대출판문화원, 2018.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주체적인 것의 재난은 몇 가지 뚜렷한 경험적 사례들로 입증될 수 있다.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다중위기를 내지 다중재난들에 대해, 다중위기론이 전제하고 있는 대응 주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 국 정부, 특히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팬데믹이 촉발하는 다중위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는 치열한 백신 국민주의(vaccine nationalism)를 표출하면서 서로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남아도는 백신을 폐기하게 되었지만 가장 백신이 필요했던 개발도상국들은 제때 백신을 공급받지 못해,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를 더 가중시키고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또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간의 불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공동 탐구 및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또 다른 장래의 팬데믹 발발의 가능성들을 남겨두고 있다.<sup>22)</sup>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능력과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 사이에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파리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차원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데서 보듯이 이 거버넌스 자체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것이었다. 더욱이 2020년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협정 탈퇴를 무효화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대외 전략은 극심한 모순을 노출했을 뿐이다.<sup>23)</sup> 요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바이든은 러시아가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자행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을 뿐이다.<sup>24)</sup> 더욱이 파리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보다 한층 더 미·중 갈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이 무역 갈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데 반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칩스

---

22) 릭 윌러스, 『죽은 역학자들: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 구정은·이지선 옮김, 나뭇잎스, 2021 참조.

23) 이점에 관해서는 이승욱, 「다중위기의 시대, 한국 지정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공간과 사회』 34권 1호, 2024 참조.

24) 이점에 관해서는 『황해문화』 124호, 2024년 가을호의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특집을 참조.

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서 볼 수 있듯이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미국의 제조업 강화를 겨냥하면서 포괄적으로 중국을 국제 무역망 및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중국과의 상호 협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 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라고 비판하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에서도 글로벌 차원의 협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갈등의 단층선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2022년 챗GPT 3.5의 출시를 계기로 촉발된 이른바 “AI혁명”을 둘러싼 세계 각 국의 치열한 기술적·경제적·정치적·군사적 경쟁은 기존의 다중재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주체적인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한층 더 잠식하고 있다.

하지만 주체적인 것의 재난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래 심화된 **정치적 불능** 또는 **민주주의의 재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국의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와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자크 랑시에르가 1995년 각자 독자적인 방식으로 “포스트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바 있는<sup>25)</sup> 이러한 정치적 불능 내지 민주주의의 재난은 주체적인 것의 이중구속이 표출되는 중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크라우치를 인용하자면, 신자유주의 이전의 고전적 복지국가 내지 사회국가에서 실현되던 민주주의와 달리 포스트민주주의에서 “빈부 격차는 커지고 있다. 세금의 재분배 기능은 줄어들었다. 정치가는 한 줌도 안 되는 기업가들의 관심사에만 주로 반응하고, 기업가의 특수 이익이 공공 정책으로 둔갑한다. 가난한 사람은 점차 정치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하지 않게 됐고 심지어 투표도 하지 않게 됐다. 이로써 그들은 민주주의 이전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차지해야 했던 위치, 즉 정치 참여가 배제된 위치로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sup>26)</sup> 그 이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다중적 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회는 계급적인 적대와 갈등에 더하여, 인종 간, 젠더 간, 세대 간에서 표출되는 극심한 혐오와 적대로 분열되어 있으며, 빈부 격차는 단순한 자산의 격차에 머물지 않고 인간화적인 분할 및 노골적인 위계질서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세계 각 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고발하는 수많은 저작들이 증언하듯이, 이러한 분열과 적대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개혁으로 인도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강렬한 정서적 적대감 및 혐오감에 기반을 둔 (극우) 포퓰리즘 운동을 수반하는 신권위주의 정치의 확장을 낳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민주주의 및 정치 일반은, 대개 제도적인 정치 질서 내의 지배적인 양당 세력 가운데 누구를 지지할 것이며, 그 세력을 대표하는 어떤 지도자에게 투표할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간에 구조적인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25) 콜린 크라우치, 『포스트민주주의』, 이한 옮김, 미지북스, 2008; 자크 랑시에르, 『불화: 정치와 철학』, 앞의 책.

26) 콜린 크라우치, 『포스트민주주의』, 37~38쪽.

글로벌 다중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 및 협력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미 진행 중인 미래: 5.18과 다중재난

9. 이런 인식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5.18이 우리가 처해 있는 다중재난 시대에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해보고 싶다. 우선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5.18이 **이미 다중재난 속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가 다중재난의 핵심 요소, 다른 다중재난들을 과잉결정하는 요소를 주체적인 것의 재난, 민주주의의 재난에서 찾는다면, 5.18은 다중재난과 무관할 수 없으며, 무관하게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10.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명제, 아마도 5.18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명제 중 하나를 이루는 그 명제를 생각해보자. 단 이 명제에 시간적인 차원을 결부하여 생각해보자. 만약 5.18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그것은 과거에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2024년 현재의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한 것인가, 더욱이 그것은 장래에도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과거에 5.18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이때 과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 다른 하위의 쟁점이 될 것이다. 그것은 1980년~1987년에 이르는 시기에 타당한 것이었는가 또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때까지 타당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타당했던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아마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답변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을 겹쳐보고 싶다. 그것은 5.18은 2024년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타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내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겹쳐보려고 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났던 두 개의 장면을 한 번 겹쳐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 두 개의 장면 중 첫 번째 장면은 2017년 5.18 37주년 기념식 장면이다. 알다시피 이 장면은, 흔히 ‘촛불혁명’이라 불리기도 하는, 2016년 가을 ~ 2017년 봄에 이르는 대통령 탄핵집회의 정치적 결과로서 수립된 새 정권, 따라서 스스로 촛불 정권을 자임했으며, 더 나아가 ‘5.18 = 촛불혁명 = 문재인 정부’라는 등식을 내세운 바 있는 문재인 정권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의 감동적인 연설로 기억되는 장면이다.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기념사가 역사적인 연설이며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기꺼이 박수를 칠 만큼 감동적인 것이었다고 극찬한 바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5.18 기념식이 홀대 받았던 것과 극적으로 대비되었던 만큼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장면을 겹쳐본다면 어떨까? 내가 염두에 둔 두 번째 장면은 2024년 올해 있었던 5.18 제44주년 기념식 장면이다. 2022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념식장에 입장했으며,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아울러 기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방 도로가 모두 막히고 먹을 것도 떨어졌던 그때, 광주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솔을 들고 나와 골목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돼 항거했고,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는 말로 5.18이 한국 민주주의 초석을 이루고 있다고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기념식과 두 개의 연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한국 언론에서 흔히 구별하는 바에 따르면 37주년 기념식은 ‘진보’ 정권이 주관한 것이고 그 연설은 ‘진보’ 정권의 수반의 연설인 반면 44주년 기념식 연설은 ‘보수’ 정권이 주관한 것이고 그 연설은 ‘보수’ 정권 수반의 연설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진보’와 ‘보수’의 뚜렷한 대비가 함축하는 만큼의 큰 차이나 대립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두 정권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는 양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 및 대립점이 존재함에도 5.18이 그러한 차이 및 대립점을 재현하기에, 또는 뒤에서 더 논의할 표현을 사용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리프리젠테이션(representation)을 제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11. 내 생각에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단순명쾌한 답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 사이에 뚜렷한 차이나 대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올해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둘러싼 두 세력 사이의 갈등에서 표출된 바 있듯이 과거사에 대한 두 정권의 인식의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광복절과 건국절의 차이, 상해 임시정부 법통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 이승만과 김구 간의 대립 설정 등은 이러한 차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이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의 진정한 핵심은 **국가폭력을 둘러싼 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당시 시작된 “과거사 정리”의 작업을 비교적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면, 윤석열 정권은, 특히 김광동 진화위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시도에서 드러나듯이 반공주의적인 또는 냉전 자유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이른바 “적대 세력”과 “양민”의 구별을 국가폭력 및 과거사 정리의 원칙으로서 복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시도의 기저에 놓여 있는 이념적 입장을 지칭하는 명칭이 지지하는 바와 같이 **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더 표면화되었지만, 현 정권은 여러 모로 볼 때 뉴라이트와 가장 친화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현 정권 들어서 뉴라이트의 주요 성원들이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가히 “뉴라이트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그것은 내 생각에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항상 “국민”과 “국민주권” 개념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의 준거로

삼고 있는 반면, 이 두 개념은 본질적인 애매성(ambiguity)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5.18 37주년 기념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마침내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촛불은 5·18 광주의 정신 위에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라는 점을 역설했다. 5·18, ‘촛불혁명’, 국민 주권이라는 세 개의 단어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이것들 사이의 등가성을 선언한 기념사의 핵심은 **국민 주권**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 주권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헌법의 첫머리에 기입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한 헌법 조문은 오랫동안 유명무실한 조문으로 남아 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은 **통치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만 제한되어 있었던 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로 인식되었으며 또 스스로 그렇게 처신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촛불이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었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다는 말은 국민이 단순히 피통치자에 머물지 않고 통치자를 통제하거나 적어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또는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 주권이라는 것이 일종의 **허구**이기 때문이다. 주권의 주체로서 인민 내지 국민과 같은 것은 실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며, 그것의 실물 내지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그 실천적 효과 속에서만 현존**한다. 곧 국민 주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위하고 실천하는 한에서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은 동질적인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며, 계급들로 분할되고 성과 젠더로 구별되고 지역·출신·학벌 등으로 나뉜다. 특히 우리가 정치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국민은 지배자와 복종하는 자,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몫을 가진 이들과 몫 없는 이들, 갑과 을로 분할된다.

따라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라는 범주에는 갑의 위치에 있는 국민과 을의 위치에 있는 국민, 1퍼센트의 국민과 99퍼센트의 국민의 차이, 10퍼센트와 90퍼센트의 차이, 20퍼센트와 80퍼센트의 차이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감춘다. 이러한 은폐가 우연적인 사태이거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아니라, **보편적 평등을 표현하는 국민 주권 개념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문제적이다. 더욱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다른 주권자 국민들과 맞서는 범주일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국민 아닌 이들을 시민 아닌 이들로, 따라서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인간 아닌 이들로 배제하는 개념**이다.<sup>27)</sup> 이때의 국민 아닌

27) 한나 아렌트의 ‘인권의 역설’에 관해서는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권, 이진우·박미애 옮김, 한길사, 2005 중 특히 9장을 참조.

이들은 물론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되 국민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간주되는 이들, 예컨대 “빨갱이들”이나 가난한 이들, 성적 소수자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을 내지 을의 을로서의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범주다.<sup>28)</sup> 국민이라는 말이 정상성의 기준이 될 때 그것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배제와 차별, 무시의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 역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민 내지 인민이라는 단일한 개념 안에 이처럼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또한 지배와 피지배, 인정과 차별, 포함과 배제의 다양한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 **공통의 이름**으로 호명된다는 사실은, 국민 내지 인민이라는 개념이 **보편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주지 않는가? 이것을 허구적 보편성 또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만적인 보편성**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성을 참칭하는 특수성**(특정한 계급이나 젠더 또는 인종이나 민족 등이 이해관계를 함축하는)의 표현이라고 고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통의 이름으로 호명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주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인민이든 국민이든,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치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든 아니면 다중이든, 또는 최근 신유물론이나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이루지고 있듯이 비인간 존재자 내지 행위자들로 정치적 행위성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감안하면, 비인간 행위자들이든 간에 정치적 주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어떤 공동체의 공통적인 틀 속에서 정치적 주체로 구성/제도화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의 정치적 애매성은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마치 “국민”이나 “국민주권”이라는 범주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범주인 듯 간주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호학적인 용어를 원용한다면, ‘비어 있는 기표’(empty signifier)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애매성은 5.18 자체에도 기입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은 역대 ‘보수 정권’에 비하면 5.18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제주 4.3이나 10.19 여순사건에 대한 태도, 더 일반적으로 본다면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났던 국가폭력에 대한 태도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가폭력에 대한 모종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적대세력” 대 “양민”의 구별이 부각되고 있다면, 5.18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시민 투쟁으로서 찬양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에서는 한국전쟁 전후의 국가폭력과 5.18 모두 무고한 민간인을 국가가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학살한 불행한 사건으로서 범주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차이, 곧 “양민” 대 “무고한 민간인”이라는 범주의 차이로 집약될 수 있는 이 차이는 5.18의 현재성을 주장하기에, 5.18을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하기

28) 이점에 관해서는 진태원, 「을의 정치적 존재론」, 『한국연구』 11호, 2022 참조.

에 적절한 것일까? 그것이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차이라는 것은 2021년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는 일련의 화해와 용서의 시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12. 더욱이 이것은 5.18의 미래 내지 장래와 관련해본다면, 더욱 더 취약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다중재난 개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앞으로 더욱 더 인류(및 더 나아가 지구상의 생명체들)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중적인 재난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재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5.18의 장래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5.18은 다중재난을 인식하고 그것에 실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5.18에 그러한 역량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5.18의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역량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들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민주화 이행이란 무엇인가?

13. 5.18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그것은 무엇보다 5.18이 오랜 군부독재 체제를 끝장낸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자 동력으로서 작용했기 때문이다. 5.18은 1987년 6월 항쟁의 원동력이었으며, 1997년에 이룩한 헌정사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토대였다. 따라서 5.18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으며, 이점에 관해서는 이제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사이에 폭넓은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그런데 5.18이 그것을 상징하는, **민주화 이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5.18연구를 비롯한 기존의 한국 정치학에서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는 관점에 따르면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삼는 이행이다. 곧 그것은 한편으로는 군부독재 체제(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 정국 및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났던 국가폭력을 포함하여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및 사회적 폭력에 대한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이행이다. 이러한 민주화 이행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민주주의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그리고 5.18의 현재 및 장래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민주화 이행에 관한 이러한 관점이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 역시 명백해 보인다. 이는 내가 이전에 최장집과 에티엔 발리바르를 비교하는 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러한 관점이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대한 두 가지 입장 가운데 **단계론적 입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sup>29)</sup> 이러한 단

29) 진태원, 「최장집과 에티엔 발리바르: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을의 민주주의: 새로운 혁명을 위하여』, 그린비, 2017 참조.

계론적 입장은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2단계 과정으로 이해한다. 곧 권위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단 확립하는 것이 첫 번째 민주화라면, 두 번째 민주화는 이렇게 정착된 민주주의의 제도적 내실을 다져가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주로 자유주의적인 틀)을 전제한 가운데, 그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제도화로 이해할 수 있다.

최장집은 국내에서 이러한 입장을 국내에서 가장 명료하게 이론화한 바 있는데, 그에게 민주주의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며(물론 이것은 국내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주로 수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것은 초역사적 보편성을 갖는 메타 민주주의적 모형이다. 달리 말하면 그에게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틀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을 가리키지,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를 설립하거나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transform)** 것을 뜻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민주화란 자유 민주주의의 틀을 전제한 가운데 그 속에서 전개되는 민주화인 것이다.<sup>30)</sup>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제3의 길’로 유명한 앤서니 기든스 등이 그에 앞서 먼저 제시한 입장이다.<sup>31)</sup>

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대한, 따라서 민주화 이행에 대한 유일한 관점은 아니다. 예컨대 포르투갈의 탈식민주의 법학자 보아벤투라 드 소우자 산투스(Boaventura de Sousa Santos)는 자유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민주주의를 재발명하고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거니와,<sup>32)</sup> 이것은 유럽 중심주의에 입각한 기든스의 관점과 달리 중남미 대륙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또는 서발틴 정치학의 관점에서 제시된 주장이다. 에티엔 발리바르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메타민주주의적 지위를 전제하는 기든스(또는 하버마스)나 최장집의 입장과 달리 민주주의의 재발명이라는 시각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제창하고 있다.<sup>33)</sup> 발리바르가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 이후에 확립된 자유주의적인 틀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것을 일종의 메타 민주주의적 모형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고대 민주주의에서 근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혁명적인 변화였다면, 앞으로 이것과 비견될 만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혁명적인 전환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sup>34)</sup> 따라서 발리바르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 또는 과정으로서의 민주화라는 표현은 최장집보다 훨씬 강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틀 그 자체를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근대 국민국가(또는 그의 용어법대로 하면 “국민사회국가”(national-social state)) 속에 구현된 민주주의 헌정의 역사적 진보성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지배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30)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0(2판);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7.

31)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한상진 옮김, 생각의나무, 2001.

32) Boaventura de Sousa Santos ed., *Democratizing Democracy: Beyond the Liberal Democratic Canon*, Verso, 2007.

33) 에티엔 발리바르,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0; 『정치체에 대한 권리』,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1; Etienne Balibar, “Democratizing Democracy”, in *Citizenship*, Polity Press, 2015.

34)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에티엔 발리바르, 「민주주의적 시민권인가 인민주권인가?: 유럽에서의 헌법 논쟁에 대한 성찰」, 『정치체에 대한 권리』 및 *La proposition de l'égaliberté*, PUF, 2010에 수록된 여러 글 참조.

이점은 발리바르의 민주주의론, 더 나아가 그의 정치철학 일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논점이지만,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한 가지 핵심적인 쟁점만 언급해두겠다. 발리바르는 근대 민주주의를 하버마스나 기든스 또는 최장집 같은 이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메타민주주의적 모형, 따라서 더 이상 원리 자체에서의 전환이나 질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는 갈등적이고 길항적인 과정 속에서만 실존한다고 이해한다. 곧 민주주의는 한편으로 민주화 운동의 벡터와 다른 한편으로는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의 벡터 속에서 갈등적으로 존재하고 변화하고 때로는 퇴락하거나 때로는 진보하는 운동으로서만 실존할 뿐이다.<sup>35)</sup> 이것은 민주정을, 군주정 및 귀족정과 구별되는 법적 정체(regime)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서양의 오래된 민주주의관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며, 스피노자가 미완의 저작 『정치론』에서 제시한 역설적 민주주의론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결과다.<sup>36)</sup> 민주화와 탈민주화라는 길항적인 운동은 민주주의에 대해 외재적이거나 이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성 자체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다. 무한한 봉기의 운동으로서 민주주의는 정의상 **아르케 없는 것**(an-arkhe), 안-아르케, 곧 무정부주의적(anarchical) 성격을 띠고 있으며,<sup>37)</sup> 이는 기존 체제(군주정이나 독재 체제 또는 자본주의 체제 등)를 무너뜨리고 해방을 쟁취하고 새로운 정치체를 형성하는 혁명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그것에 기반하여 새롭게 수립된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파괴적인 작용으로부터 민주주의적 봉기의 운동이 획득한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때로는 억압하고 배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하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탈민주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락을 낳게 된다.<sup>38)</sup> 따라서 어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서 존재하고 작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내재하는 탈민주화의 경향에 맞서 새로운 민주화의 운동을 추구해야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로의 지속적인 쇄신 운동이 없는 민주주의는 정의상 이미 탈민주화의 방향으로 퇴락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미증유의 다중재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추구해야 하는 민주화의 운동 역시 이전의 민주주의의 성취 및 목표를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과제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35) 민주화와 탈민주화라는 이중적인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찰스 틸리(Charles Tilly)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발리바르는 미국의 정치이론가 낸시 브라운의 작업에 준거하고 있다. Nancy Brown, "Neo-liberalism and the End of Liberal Democracy", *Theory & Event*, vol. 7, no. 1, 2003.

36) 스피노자의 역설적 민주주의론에 대해서는, 에티엔 발리바르,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그린비, 2014 참조.

37) 민주주의의 무정부주의적 특성을 강조한 현대 철학자는 자크 랑시에르와 조르조 아감벤이다. 자크 랑시에르, 『불화: 정치와 철학』, 앞의 책; 조르조 아감벤, 『도래하는 공동체』, 이경진 옮김, 꾸리에, 2014. 또한 최근에 출간된, 현대 유럽철학의 아나키즘적 성격에 관한 카트린 말라부의 저작도 참조. Catherine Malabou, *Au voleur! Anarchisme et philosophie*, PUF, 2022.

38) 그렇다고 해서 탈민주화의 운동이 민주주의(더 나아가 모든 정치체)의 토대를 이루는 무한한 봉기적 힘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체도 실행하지 못한 것이며 앞으로도 불가능할 터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무한한 봉기의 역량이야말로 모든 정치체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14. 내가 보기에 이처럼 봉기로서의 민주주의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또는 넓은 의미에서 시민 권 헌정(constituion of citizenship)) 사이에 존재하는 이율배반은 한국 민주주의 자체만이 아니라 그 상징으로서 5.18 역시 동일하게 겪고 있는 과정이다. 5.18이 오늘날 37주년 기념식과 44주년 기념식의 식별 불가능성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더 나아가 지난 날 이룩한 민주화의 성취에 안주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든 양자 사이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데 자족한다면, 5.18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탈민주화의 과정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셈이며, 자신이 그동안 이룩한 성취마저 잠식할 위험을 자초하는 셈이다. 또한 만약 그렇다면, 5.18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현재성을 주장할 만한 역량을 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를 기약하기에는 턱없이 초라한 잠재력만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마지막으로 자크 데리다가 『마르크스의 유령들』 「머리말」에서 유령에 관해 언급한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발표를 마치겠다. 데리다는 “**현재 살아 있는 것들로 존재하지 않는 타자들—이들이 죽은 이들이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이든 간에—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어떠한 윤리도 어떠한 정치도 (혁명적인 정치든 아니든 간에) 가능하지 않고 사고 불가능**”<sup>39)</sup>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유령들 없이는, 유령들과 함께 하기가 없이는 “어떠한 타자와 **함께—존재하기도, 어떠한 사회적 관계(socius)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유령들과의 관계야말로 타자들과의 관계 일반, 사회적 관계 일반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다. 하지만 데리다는 이러한 유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곧 그 유령은 **이미 죽은 이들**(아마도 많은 경우 국가폭력에 의해, 사회적 폭력에 의해)의 유령이면서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의 유령**이다(더욱이 이들은 단지 인간적 유령들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유령들과 함께 하기가 없이는 어떠한 윤리도, 어떠한 정치도 가능하지 않다면, 그 유령들을 과거의 유령들로만 한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떤 이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다중재난의 시대에 정의의 문제(윤리학에서 특히 “세대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라고 부르는 것), 민주주의의 문제의 중핵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미래의 유령들에 대한 정의의 책임을 배제하고 과거의 유령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으며, 또한 역으로 과거의 유령들에 대한 올바른 애도 없이 미래의 유령들에 대한 환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야말로, 다중재난의 시대 윤리와 정치의 핵심 중 하나일 것이다. 오늘날의 5.18은 이러한 애도와 환대의 변증법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리프리젠테이션과 참여의 새로운 변증법

3) 폭력에 맞선 정치

39)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진태원 옮김, 그린비, 2014, 12쪽. 강조는 데리다.

## 「다중 재난 시대의 5.18」에 대한 토론문

노영기(조선대)

토론하기에 앞서 제가 팬스레 토론자로 나선 게 아니었는지 반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내심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토론자를 섭외하는데 아무도 없게 되자, ‘에라 모르겠다’는 심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토론자로 섭외된 배경이며, 다른 한편으로 토론자로 적절한가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료를 날줄과 씨줄 삼아 사실을 밝혀내어 글로 정리하는 어설픈 ‘실증 역사학’을 하는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료를 보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렇기에 발표자 선생님의 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마치 일제 말기 친일파들의 ‘국민-황국신민-됨의 의무를 다하려’고와 같은 느낌으로) 설익은 생각을 문제 제기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표자 선생님은 ‘다중재단’을 인식하기 위해 ‘복합위기’라는 개념을 끌어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며, 동시에 이것이 ‘치안의 관점에서 이해된 이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배질서의 유지와 지배계급의 이해 보장’이라는 목표의 달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발제자 선생님은 ‘생태적 재난이나 보건 재난’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태적·보건적 재난은 인류 문명의 토대 자체를 잠식하는 문명적 위기이며 민중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낼 수밖에 없지만, 복합위기론에서 이 문제는 방치되거나 배제되고 있다.”는 평가가 과연 적절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재난과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비정규직 노동자, 여성과 성소수자 등등)들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생태적, 보건적 재난이 배제된’다는 평가가 적절할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기존의 지배질서를 유지하거나 지배계급의 이해보장의 측면에서 문명이나 피 지배계급(민중)을 적절하게 유지 보존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사회적 소수자의 배제를 염두에 두고 ‘복합위기’를 협소하게 기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식론적 문제 제기와 “을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사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인식론적 투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합니다.

둘째, 조금 단순한 질문으로 중국 시진핑의 핵심 참모인 천이신의 “6대 효과” 주장은 또 다른

중화사상(中華思想)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재난의 시대에 5·18은 실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지적은 뼈아프지만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드는 의문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글에서는 ‘다중재난의 시대’, 사람들은 5·18을 ‘약방의 감초’처럼 불러낼까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5·18 또는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담당해왔거나 향유해왔던 그 위상과 지위, 상징 등등에서 볼 때 당연하게 받아야 할 문제 제기인 동시에 고스란히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5·18은 ‘그 정도는 당연하게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5·18은 ‘오래’ 그 위상에 걸맞는 임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44년이 흐른 가운데 ‘당사자주의’를 너무도 혹독하고 당연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에 이른 측면이 많습니다.<sup>40)</sup> 제 생각으로는 1993년에 마련한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집단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에 국가가 개입하며 어그러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헝클어지고 원칙에서도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파괴를 보며 그저 살기 위해 폭력에 저항하고 뒤이어 총을 들며, 중국에는 목숨을 걸었던<sup>41)</sup> 댓가 치고는 지나치게 혹독한 평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중재난의 시대에 5·18이 연루되었다는 선생님의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5·18의 위상과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사자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다시 5·18을 불러내는 오늘의 현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진정 5·18이 담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거사 청산’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권 교체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과거사 청산 방식의 문제인지 좀 더 냉철한 고민과 현실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달리 말해 과거 가해자이던 국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게 올바른 방식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기와 원칙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핵심 자료 발굴, 엄청난 예산,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에서 볼 때

---

40)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특전사동지회의 망월묘지 참배와 ‘용서와 화해’ 선언이었다. <‘용서와 화해’의 전체 (2023.3.7.)>(<https://magazine.changbi.com/MCWC/WeeklyItem?id=1734>)

41) 과장이 많은 영화지만 ‘화려한 휴가’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이미 넘치도록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선생님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덧붙이며 토론을 마칠 것입니다.



# ‘자기’의 재구성과 ‘픽셔널 커먼즈’

김미정(성균관대)

이 글은 오늘날 ‘자기서사’ 부상의 의의와 딜레마를 검토하고, 이주혜의 최근작 『계절은 길고, 기억은 영영』(2023)을 읽으며 ‘자기서사’의 원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근대 이래 ‘자기’를 이야기하는 서사의 전통과 불가분인 1인칭 및 존재의 기본 단위로 상정되어 온 ‘개인(individual)’을 둘러싼 이념(소유, 정체성)을 질문하면서 ‘자기’의 존재론적 단위와 원리를 재고하고, 그것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잇는(commomng) 원리를 발견해 보고자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이른바 정동적, 존재론적 전회(turn) 등의 사유에 빛진 바가 큰데, 본고에서 본격화하지는 못했으나 5월 광주 관련 서사 연구에도 약간의 참조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문학예술과 커먼즈(communs) 사유 사이의 불가피한 이격을 좁혀보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 1. 사반세기 전, ‘우리’ 안의 차이들 혹은 당사자의 위치성

수업에서 만나는 젊은 분들로부터 ‘당사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당사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 혹은 내가 아닌 타자의 고통을 대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아왔다. 이는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간을 경유하면서 타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관련해서 문화예술계에서의 이슈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나 역시 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살아가며 고민하고 있는 이의 한 명일 따름이므로, 현재형으로 이어지는 고민에 뾰족한 답을 갖고 있을 리 만무했다. 그럼에도 저 질문에 대한 사유의 물꼬나 방향은 공유할 필요가 있는지라, 그때 소개하는 텍스트 중 하나가 제3세계 문학 전공자이자 페미니스트 재현 연구자인 오카 마리의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sup>1)</sup>이다.

이 책은 ‘보편적’ 정의라는 이름 하에 환원될 수 없는 제3세계 페미니즘과 문화의 현장을 다양하게 성찰한다. 약 25년 전에 발간되었지만, 이 책이 선취한 문제의식이나 질문들은, 지금 이곳에서의 재현 관련 고민들에 중요한 영감과 자극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책의 8장 「목격-증인 되기 : 사건의 분류와 ‘공감’의 정치학」은 타자의 고통에 내가 공감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텍스트다. 여기에는 ‘하나의 폭력과 세계

1) 오카 마리,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이재봉, 사이키 가쓰히로 옮김, 현암사, 2016.

의 고통'에 대한 (장 자끄 루소-한나 아렌트-시모코베 미치코를 경우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잠시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짐승에 공격당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한 아이가 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고통스러운 비명만 지르고 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감옥의 창살 안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 발만 구르고 있는 한 죄수가 있다. 지금 폭력은 하나이지만 그와 관련된 고통은 세 가지다. 우선, 짐승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아이가 경험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첫 번째다. 또한 그것을 지켜보며 손을 쓸 수 없어 혼절 직전인 어머니의 고통이 두 번째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창살 너머에서 그들의 고통에 한없이 무력한 제3자의 절망과 비탄도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죄수의 고통이 곧 세 번째 자리에 놓인다. 요컨대 고통의 진원지는 하나일지라도 각 자리마다 각기 다른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의 내용은 결코 단일할 리 없고 그 역치도 모든 존재마다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당사자의 이해나 공감에 어떻게 가능한지 이야기하는 에피소드이지만, 모든 고통의 속성과 타자-나 사이의 관계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오카 마리는 이 “세 개의 고통과 하나의 폭력” 상황에서 모든 연민compassion 혹은 공감의 원형이 되는 것은 세 번째 죄수의 고통이라고 한다. 타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문제에 대한 한 우리는 모두 ‘죄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모든 개별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공감의 다른 층위들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타자와 나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거리를 인정하며 출발해야 하는 공감을 이야기한다.

즉, 타자의 고통 자체는 내 고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타자가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들의 ‘목적-증인’이 될 수는 있다. 그 ‘목적-증인’의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있고,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카 마리는 “사건의 폭력성은 타자의 고통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 압도적인 무력함, 그 고유의 고통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8장을 마무리한다. 그녀의 주장은 ‘우리의 고통’을 말하기 이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고통에 우선 오롯이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공감에 관한 한, 나와 타자 사이의 차이를 우선 긍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공감한다’와 같은 말은 때로는 충분히 성찰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모두 ○○다’라는 지지의 열망은 종종 ‘우리’라는 말 안의 무수한 차이나 각각의 고유한 위치성을 지운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은 상식처럼 감각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시 적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데...’로 시작하는 여러 질문들 앞에 참고가 될 이 텍스트가 종종 절반만 읽히거나, 혹은 오독되는 장면도 적지 않게 접해왔기 때문이다. 오카 마리의 글은 타자의 고통 앞에서 “나 자신의 이 압도적인 무력함”을 먼저 긍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공감 혹은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감이나 ‘우리’의 조건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당사자’를 둘러싼 물음과 함께 오늘날 독자가 자주 ‘압도적인 무력함’에 방점을 찍고 독서를 멈추는 모습을 접하

게 된다. 곧, 나와 타자 사이의 좁힐 수 없는 차이만을 긍정하거나, 타자에 대한 공감의 불가능성 혹은 진짜 당사자의 자리를 가리는 독해의 알리바이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 자신의 이 압도적인 무력함” 너머 필자가 의도했을 궁극적 의미까지 닿지 않는 오늘날의 많은 독해는 우리 시대의 어떤 곤경과 관련되지 않을까. 명백히 암시된 행간 너머가 읽히지 않거나 텍스트의 절반만 독해되는 것은 우연적이 아니라 지극히 징후적이다. 개별적 리터리시로 환원할 수 없는 동시대 감수성의 층위가 이를 가로지름에 분명하다. 이때, 21세기 초와 그로부터 사반세기 후의 달라진 사정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앞서 오카 마리의 이 책이 사반세기 전에 출간되었다고 적었다. 당시 이 텍스트뿐 아니라 ‘타자’ ‘고통’ ‘공감’ 등을 둘러싼 여러 문제의식이 제출된 사정도 떠올려 본다. 그것을 지금 일일이 대조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근대적인 어떤 가치들이 맹목적으로 혹은 관성적으로 말해진 것에 대한 질문과 관련되었다. 즉, 오카 마리의 저 텍스트가 나와 나 사이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읽히는 현재적 상황에는, 세기말 세기초 ‘우리’라는 말로 언표화되곤 한 가치들이 무엇을 은폐하고 있었는지 그 복잡함을 막 환기하고 공유해간 당시의 문제의식에 비추어볼 때 아예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세기말(세기초)의 문제의식 및 문제설정 방식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다시 한참의 시간을 지나왔고, 그것이 지금 조금 다른 형국에 놓인 것인지 모른다.

오늘날 ‘당사자’ 논의에 전제처럼 놓여 있는 것은 구획된 ‘나’ ‘우리’ 식의 이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오늘날 존재의 단위들이다. 이것은 오카 마리의 저 글에서도 마찬가지다. 구획되는 존재를 기본으로 상정하면서 ‘나/우리’ ‘개인/전체’ 식의 대타적 구도도 꽤 오랫동안 상식처럼 여겨졌다. 한국 문학에서도 ‘나/우리’ ‘개인/전체’ 식의 구도는 문학사적 전환의 시기마다 자주 논해져 왔다. 지금 사용되는 ‘당사자’라는 말도 그것이 ‘나’ ‘우리’ 어느 쪽에 대한 것이든 존재에 대한 구획된 단위의 이미지를 통해 구사된다. 하지만 지금, 나의 문제와 너의 문제, 나와 너를 궤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언가를 비롯하여, 어떤 ‘구획’에 기반한 사유에 어떤 검토가 필요할지 모른다. 지금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 2. 다시, ‘자기’를 말하는 시대 : 최근 ‘자기 서사’ 담론을 일별하며

오늘날 ‘자기 서사’의 시대라고들 한다. “당사자가 특정 시점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자기 서사가 문화적 우세종이 되고 있다.”<sup>2)</sup>는 진단이 상기시키듯, 오늘날 자기 서사는 출판계 및 담론계의 주요 현상일뿐 아니라 실제 다양한 분과적 글쓰기(픽션, 논픽션 및 연구 비평장의 글쓰기 등)의 스타일까지 변화시키고 있다.<sup>3)</sup> 이때의 ‘자기

2) 김은하, 「짧고 아픈/미친 여자들과 자기 이론으로서의 글쓰기 : 여성 거식증에 관한 일인칭 서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61, 여성문학학회, 2024.

3) 예컨대 2010년대 중후반 한국 출판계의 에세이북은 물론이거니와, 학술 검색 사이트(riss.kr)에서 ‘자기서사’라는 항목으로 검색을 하면 이 말이 연구 키워드로 부상하는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이후 2배 이상의 양적 증가를 보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서사'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 전반을 지칭하지만, 과거 자서전, 회고록, 사소설 등의 기존 익숙한 양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오늘날적 양상을 뚜렷이 갖고 있다. 또한 이 '자기 서사'의 오늘날적 전개에도 오카 마리의 텍스트가 강조한 '죄수'의 위치, 즉 관성적으로 말해져 온 '우리'에 선행할 개별적 '자기' 위치에 대한 통렬한 감각과 인식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무언가에 대표(representation)될 수도, 표상될 수도 없는 '자기' '나'에 대한 인식과<sup>4)</sup> 존재 자체의 생동감이 이 오늘날적 자기 서사를 추동하고 있다.

본래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장 자끄 루소의 『고백록』(1770)이 상기시키듯, 자신을 신과 독대하는 개인으로서 발견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일로부터 출발해 왔다.<sup>5)</sup> 이것이 근대 소설의 한 기원을 이루어 왔다는 점은, 동아시아 근대 문학 초창기의 각 언어권마다의 사정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에도 근대 이래로 공고해지는 공적/사적 영역의 분할과 그 젠더 역할이 개재하여, 가령 남자들의 자기 서사는 주로 자기들의 공적 삶을 기록하는 회고록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여자들의 자기 서사는 사사로운 잡문이나 에세이로 간주되며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왔다.<sup>6)</sup> 또한 식민지기 자기 서사 연구자 장영은은 이러한 여성에 할당된 사사로운 글쓰기조차 한국사회와 문학의 전통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그 지위를 바탕으로 이룬 사회적 성취를 연대기적으로 회고하는 이야기로 인식”되며 “여성들에게 공적 영역으로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던 탓에 “전통적으로 여성은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지도 획득하지도 못했다.”<sup>7)</sup>라고도 일갈한다.

즉, 근대 이래 한국 문학에서 소설, 시, 희곡, 평론 등의 장르에 비할 때, 그 성격이 모호한 사적인 글쓰기가 주변화되어 온 사정은 이러한 이중적 젠더 편향의 문체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최근 에세이 출판물을 대상으로 당사자 서사, 자기 서사를 주목하고 분석해 온 연구자 김은하의 논의가 궁극적으로 “장르 서열주의” 속에서의 “문학적 시민권의 문제”<sup>8)</sup>를 겨냥한 것에도 이러한 사정이 놓여 있다. 김은하는 질병과 광기에 대한 자기 서사 에세이 붐을 다루며 오늘날 자기서사 현상은 “자기 자신의 삶을 무대화함으로써 비규범적인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실험”이자 “질병/광기는 단순히 정상성을 이탈한 증거가 아니라 젠더 규범성과 여성의 갈등을 함축한 것으로 자기 서사의 여성주의적 급진성을 증명”한다고<sup>9)</sup> 의미부여한다. 오늘날 자기 서사 출판물(특히 우울증 관련)의 주요 저자가 20-30대 여성들이라는 사실도<sup>10)</sup> 과거와 달리 지금 자기 서사가 어

4) 졸고, 『흔들리는 재현·대외의 시간』, 『움직이는 별자리들』, 갈무리, 2019.

5) 가라타니 고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도서출판b, 2010 ; 스즈키 토미, 『이야기된 자기』, 한일문학연구회 옮김, 생각의 나무, 2004.

6) 필립 르퀼, 『자서전의 규약』, 윤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8.

7) 장영은, 『나해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민음사, 2018.

8) 김은하, 앞의 글, 131쪽.

9) 김은하, 앞의 글, 107쪽.

10) 이정연, 「우울의 시대 : 우울의 의료화와 '우울증'의 자전적 서사 담론의 의미」, 『현상과 인식』 150,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2. 이 논문은 '우울증' 관련 서사를 주요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다수의 자기 서사 논의가 여성, 소수자의 사회적 지위, 역할, 정체성 등의 재현에 주목하고 있듯 자기 서사 쓰기의 주체와 성격이 달라진 양상은 충분히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다.

면 젠더 형식을 지니고 있는지 잘 이해시킨다. 오늘날 문학 장르의 주변부로부터 강하게 부상한 자기 서사는 근대적 자기 표상과 재현이 엘리트 남성의 고뇌를 특권화해 온 장이었음을 역으로 환기시켰고, 문학적 위계의 주변부적 목소리가 가시화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기 서사 현상은 글쓰기와 젠더의 구조로부터의 이탈만이 아니라, 이른바 정상성(normality)으로 포괄되지 않아 온 모든 존재들의 글쓰기가 빈출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최근 반드시 문학이 아니더라도 분야를 막론하고 자기의 경험과 삶의 내밀함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가로지르는 세계를 서사화하는 이른바 자기문화기술지적(ethnographic) 글쓰기의 출판계에서의 주목도<sup>11)</sup> 그것을 방증한다. 또한 이 세계의 표상 질서에 내재된 폭력을 고발하며, 특정 표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체적 삶들이 이 세계에 늘 존재해왔음을 증거하는 소수자 글쓰기의 부상 역시 이러한 오늘날 자기 서사 현상의 핵심을 증거하는데, 이것은 주류 정상성 이면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직접 가시화, 가청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치적 행위일 수 있음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예컨대 스페인 출신 예술비평가, 큐레이터이자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폴 B. 프레스시아도는 자기의 소수자성과 주체 되기의 과정 자체를 내용이자 방법으로 활용하며 자기 활동(창작, 연구, 비평)의 장에서 급진적으로 수행해왔다.<sup>12)</sup> 자기 서사와 관련하여 그의 이름을 알린 책 *Testo Junkie*(2008)는 그가 성별 전환을 위해 스스로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하고 투여하던 시간의 정밀한 기록이다. 그는 이것을 오토 픽션의 퀴어작가 기욤 뒤스탕(Guillaume Dustan)의 죽음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복수라고 표방하기도 하며 오늘날 자기 서사와 소수자 글쓰기의 상관성을 강하게 표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국의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 루인 역시, 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퀴어의 죽음이 몇몇 이미지나 특정 서사구조로만 소비되는 상황을 고찰하고, 현재 사회에 널리 퍼진 규범적 트랜스 서사를 중지시키고 당사자들의 자기 서사를 구성할 필요를 강력히 제기해 왔다.<sup>13)</sup> 즉 오늘날 자기 서사는, 어떤 범주로 환원되거나 규범적 서사 구조를 통해서 존재나 사건이 이해되어온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통해 거듭난 양식이며, 거대한 사회의 구조와 개인들의 내밀한 감정 체계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하게 역설하는 양식이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자기 서사 붐은 단지 에세이 출판물, 즉 논픽션 계열 뿐 아니라, 전통적인 픽션 속 자기 표상의 성격을 변화시키기도 했다고 간주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젊은 여성 작가들의 픽션에서는, 예컨대 SF와 같이 큰 규모의 세계를 전제하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실감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로부터 이야기의 화소와 동력을 끌어내며, 나-세계 사이의 얽힘에 대한

---

11) 특히 최근 학술장에서 단지 연구 대상이나 현상이 아니라 자기 서사의 주요 참조 사례로 주목받은 대표적인 책으로 캐시 박 흥, 『마이너 필링스』, 노시내 옮김, 마티, 2021. ; 그레이스 M. 조, 『전쟁 같은 맛』, 주혜연 옮김, 글항아리, 2023. 등이 있다.

12) 현재 프레스시아도의 책은 『대항성 선언』(이승준, 정유진 옮김, 포이에시스, 2022)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스페인어로 작업하던 프레스시아도의 이름을 영어권에 알린 책으로 *Testo Junkie: sex, drugs, and biopolitics in the pharmacopornographic era*(2013), *Pornotopia: an essay on Playboy's architecture and biopolitics*(2014), *An Apartment on Uranus*(2020) 등이 있다. 그의 자기 서사 수행 과정이 시대적으로는 세기말 세기초 푸코 + 들뢰즈 독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오늘날 자기 서사 '담론'을 이해할 때 참조할 수 있을 것 같다.

13) 루인, 『죽음을 가로지르기 : 트랜스젠더퀴어, 범주, 그리고 자기 서사』,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 여이연, 2018.

감수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2000년대 중반 이래로 마치 사라진 장르처럼 여겨진 이른바 ‘소설가 소설’ ‘예술가 소설’도 최근 젊은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 다시 자주 등장하고 있다. 2020년대 젊은 여성 작가의 ‘소설가 소설’ 3편을 분석하는 연구자 천서운은, 오늘날의 자기 서사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발화하는 방식이자 발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 배려의 방식”이라고 의미 부여한다. 이때 필자는 자기 서사를 “자아의 유희나 유아론적 퇴행”의 혐의와 선명히 구별지으며, 이것이 “자기에 의한 자기의 통치”이고 “권력 관계에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특이성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의 발명”이자 “포스트-포스트페미니즘적 주체의 주체·화(化) 전략”<sup>14)</sup>이라고 의미화하기도 한다. 페미니즘 리부트를 계기로 가시화한 근대적 대표·재현·표상 체계로의 환원 거부와 새로운 자기 표현 양식 및 그 현상을 의미화할 때 푸코의 ‘자기 배려’ ‘자기의 테크놀로지’가 유력한 레퍼런스로 참조되는 담론적 경향성도<sup>15)</sup> 잠시 짚어 둔다.

### 3. ‘자기 서사’를 담론화 할 때 더 질문할 것

그런데 픽션, 논픽션을 불문하고 창작자의 자기반영적 서사가 텍스트의 주요 내용과 형식을 이루는 양상은 반드시 문학에서만 특징은 아니라 오늘날 문화예술 전반에서 공히 목도되는 바다. 이것이 특히 예술을 둘러싼 기술 변동(인터넷 출현)과 더불어 가속화했다고 분석하는 미학자 보리스 그로이스는, 오늘날 제작 과정 자체를 가시화하고 그것이 곧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는 제작의 투명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요컨대, 오늘날 ‘자기 서사’는 문학 내의 위계와 소수자 정체성의 구조를 가시화하고, 정상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자기를 주체화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예술/비예술, 창작/감상, 공/사, 여가/노동 식의 무수한 이분법들이 모호해진 시대의 조건과 예술을 주체화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에는 필히 기술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체제의 맥락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글 도입부의 오늘날 ‘당사자’라는 말을 둘러싼 어떤 곤경에 대한 문제의 식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자기 서사 현상이 근대적 표상 체계로의 포섭을 거부한 새로운 표현 주체의 탄생에 암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방적 글쓰기’로 의미화할 때 더 고려할 것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자기 서사 현상을 주목하는 연구자 김은하는, 오늘날 출판계의 에세이 붐이 “신자유주의 셀피(selfy) 문화”와 무관치 않은 측면도 있으리라는 점을 언급한다.<sup>16)</sup> 또한 오늘날을 우울증의 시대로 조망하고 그 담론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자 이정연은 “통치의 기술은 병자들을 탈정치화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능동적으로 만듦으로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sup>17)</sup>하는 측면이 오늘날 자기 서사(특히 우울증 서사)에서 발견된다고 조심스레 언급하기

14) 천서운, 「2020년대 여성 소설가 소설에 나타난 자기 서사의 윤리」, 『여성문학연구』 61, 여성문학학회, 2024.

15) 김미현, 「201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자기 돌봄’의 윤리」, 『한국문예비평연구』 6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최배은, 「최근 청소년 SF의 자기돌봄 서사 연구」, 『대중서사연구』, 2024; 박찬효, 「2010년대 이후 장애 여성 소설에 나타난 자기 돌봄의 정치성」, 『여성문학연구』 61, 여성문학학회, 2024 등 다수.

16) 김은하, 앞의 글.

도 한다. 한국에서의 자기 서사가 주로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간을 통과하며 부상해온 양식이라는 점에 포커싱되어 온 것에 덧붙여, 오늘날 기술 및 자본주의 통치술의 문제를 보다 개입시켜 사유할 필요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 자기 배려 등이 오늘날 자기 서사 담론에서 주요 레퍼런스로 활용되는 측면을 앞서 언급했다. 이 개념들이 1970년대 서구에서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드라이브와 ‘개인의 자기 통치’의 슬로건 와중에, 신자유주의적 품행 통치와 예속화를 거절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연마하고 구축하는 능동적 기예(art)로서 제안된 개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설명도 더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다. 우리의 사유, 감정, 신체 모든 것에 조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통치술 속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향해 더욱 능동적이고 더욱 생산적일 것이도록 요구한다. 자기 삶을 질료 삼아 세계를 조망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자기를 구축해가고자 하는 글쓰기와 출판시장의 회로 혹은 자기 삶을 자원화 하여 관리할 것을 권장하는 통치술 사이의 질적 차이도 애매하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통치술이 ‘개인’의 내밀한 신체(감정, 사유)를 조율하고 점점 더 예속화와 주체화를 혼돈시키는 상황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체감의 영역이다. 자기 서사의 행위자로서의 ‘자기’가 누구인지, 그러한 글쓰기의 재료가 무엇인지 질문할 때 그것은 공교롭게도 자기 관리, 자기 경영, 자기 계발 등의 언어와 결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이러한 지적이 곧 오늘날의 자기 서사 현상을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할 절대적 이유는 아니라는 점이다. 공고하다고 여겨져 온 어떤 전선(戰線)은 모호해진지 오래고, 자기 서사뿐 아니라 많은 현상이나 담론이 오늘날 전유/재전유의 대상이다. 그렇기에 ‘자기’의 원리와 내용을 근본적으로 질문할 필요도 함께 제기되는 것이다. 최근 예컨대 ‘우리’를 돌보기 이전의 과제로서의 ‘자기’ 돌봄이 부상하고, 실제 돌봄 영역에서의 다양한 주체성(예컨대 돌봄 노동, 영케어러 담론)이 가시화하는 과정도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적극적 실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 상황 속에서 ‘자기 배려’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실천으로서 조망할 수 있는 ‘돌봄 노동’ ‘영케어러’ 등의 주요 문제들이, 의도치 않았을지라도, 수행/수혜 도식 및 행위자의 구획된 위치를 전경화하면서 돌봄 상황의 복잡성이나 정동적 행위성을 잘 보이지 않게 한 딜레마도<sup>18)</sup> 생각해본다. 이것은 일종의 ‘당사자(성)’에 대한 오늘날의 오해와도 그 논리축을 공유하는 바가 있는데, 가령 문화예술계에서 당사자(성)의 강조는 창작 과정에서 ‘당사자만 쓸 수 있다’ ‘당사자만 말할 수 있다’는 식의 감각으로 회의되거나 오인되는 과정을 겪기도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타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감각을 후퇴시킨 징후가 가령 ‘퀴어서사’ 창작-감상 장에서 돌출되기도 했다. 문화연구-평론가 오혜진은 한국문학장에서 퀴어문학의 당사자주의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17) 이정연, 앞의 글.

18) 케슬린 린치,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강순원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6. ; 줄고, 「가치로서의 돌봄—자본주의 가치 법칙으로부터 돌봄 해방시키기」, 『돌봄의 시간들 : 돌봄에 관한 9가지 정동적 시선』, 생태적지혜연구소 협동조합 편, 모시는사람들, 2023.

점검하는 지면에서 한 개인 ‘저자’로 환원되는 ‘당사자주의’를 우려한 바 있듯,<sup>19)</sup> 당사자(성)의 주장이 아이러니하게도 관계, 연대의 장에서 협소화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어권에서의 당사자라는 말과 관념의 부상과 더불어, 그 편향적 이해는 쿼어 문학장뿐 아니라 오늘날 다방면에서의 곤경으로 작동하는지 모른다.

‘당사자가 아닌데’로 시작하는 오늘날 재현 관련 질문에, 오카 마리의 텍스트 속 ‘위치성’에 대한 사유로부터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자주 타자와 나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거리를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독해의 경향성에 대해 앞서 언급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곤경들의 전제와 마찬가지로, 자기 서사의 글쓰기 주체로 상정되는 ‘자기’ ‘당사자’의 이미지는 타자나 우리에게 앞서 존재하는 개인(individual, 더 이상 나뉘지 않는/차이로서만 설명되는)으로서의 ‘나’에 대한 관념이 전제로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을 기초 단위로 삼아 인구로 셈하고 관리해 온 근대 이래 통치술은 모두의 감각과 사유의 말단부까지 내밀하게 조율한다. ‘나’를 설명하는 도식으로서의 ‘자기=1인칭=개인’의 계열체는 하등 이상하지 않다. 이러한 ‘나’들의 총합으로서 ‘우리’를 상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구획된 신체이자 어떤 사건의 주체로서 존재를 사유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오늘날 근대적 자기 표상과 그 전제의 곤경은 분명 다양하게 목도되고 있다. 예컨대, 다소 비관적으로 ‘나≠개인’의 상황을 역설하는 셈일지라도, 오늘날 기술 변동 상황 속에서,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 확인되는 고유한 나의 이미지도 이제는 점점 더 환상이 되어간다. 어쩌면 오늘날 온라인 네트워크 상황 속에서의 우리는 개인이라기보다 분인·분할체(dividual)적인 것으로 존재, 유동하고 있다. 오늘날 웹에 접속하여 주체적으로 활동한다고 믿는 많은 일이(ex. 스크롤하고 입력하고 검색하고 영상을 보고 콘텐츠를 업·다운로드하고 등) 욕망의 행위라기보다 자본의 충동(drive)과 관련된다고 좌파 정치학자 조디 딘이 말한 것도 벌써 SNS 태동 초창기의 일이다.<sup>20)</sup>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하게 고유한 개체로서의 ‘나’를 강박하게 만든다.

사용자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표방하는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도 예외는 없다. 내가 선택한 콘텐츠와 그것의 패턴분석 결과는 곧바로 다음 추천 목록으로 돌아온다. 주체적 행위, 고유성, 독창성 같은 변별자질을 통해 ‘나’는 개인/개체로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점점 더 환상이 되는 듯하다. 점점 예측할 수 있는 ‘나’, 데이터화된 ‘나’를 재귀적으로 확인한다. 지금 단적으로 온라인과 접속하는 ‘나’의 존재 방식을 언급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욱 ‘진정한 나’ ‘진짜 나’를 갈망할 수 밖에 없게 세팅된 기술 속에 있다. 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통해 상기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우리 존재의 원리나 조건은 반드시 새로운 전회(turn)의 사유들을 통해 연역해 내지 않아도 스스로 이미 다양하게 그 균열을 경험 중이다.

즉, 오늘날 재활성화한 자기 서사에서 ‘자기’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 사유될 여러 이유 앞에

19) 오혜진, 「지금 한국문학장에서 ‘쿼어한 것’은 무엇인가(1)」, 『문학과사회-하이픈』, 2018년

20) Jodi Dean, *Blog theory: polity*, 2010, 2장. 그녀는(슬라보예 지젝을 경유하여) 웹에서의 사용자들에 있어서, 즐기라는 명령에 의한 과잉된 향락을 통해 지지되는 상상적 아이덴티티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스크롤, 터치 등의 행위는 지향과 도달의 욕망 행위라기보다, 향락의 무한 루프를 의미한다는 이야기다.

놓여 있다. 앞서 내내 살폈듯,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소수자의 존재와 그들의 글쓰기를 가시화한 양식이자, 근대적 대표, 표상 체계를 거절하며 스스로 자기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구축해 가겠다는 실천이 곧 오늘날의 자기 서사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이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발견되는 딜레마의 하나는 ‘자기’의 존재 방식과 내용에 관련될 것이다. ‘자기’를 둘러싼 표상은 여전히 근대 이래로 신 앞에서 독대(루소 시절의 신은 지금 어쩌면 스스로를 포함하는 대중이 되었는지 모른다)하는 ‘개인’으로서의 ‘나’, (더 이상 나뉘지 않는) 차이로만 확인되는 ‘나’, 공사 구획된 영역 어딘가에 있는 ‘나’, 어떤 정체성과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나’에 간혀 있는지 모른다. 물론 이것은 현행 세계 속에서 불가피한 ‘나’의 표상임도 부정할 수 없다. 앞서 강조했듯 근대 이래의 세계관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단적으로 주민번호라는 표식이 암시하듯, 모든 생을 어떤 정체성들을 소유한 인구로 셈하고 관리하는 통치술의 세계다. 그러하니 오늘날 세계의 여러 곤경은 역시 이 ‘개체’ 중심 존재론 및 그 통치술에 관련되는지 모른다.<sup>21)</sup> 즉, 오늘날 ‘자기’의 단위가 여전히 ‘1인칭 당사자 개인’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 및 근대 이래 ‘개인’의 신화와, 오늘날의 여러 곤경(예컨대 당사자(성)에 대한 오해)이 무관치 않으리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본다. 오늘날 ‘자기 서사’의 부상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재구성할 과제를 던진다는 점은 이 정도로 확인해 두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 한 편의 소설을 경유하며 이어가 보겠다.

#### 4. ‘자기’의 재구성 : 이주혜,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2023) 읽기를 경유하여

지금 읽으려는 장편소설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2023)<sup>22)</sup>은, 여성적 글쓰기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주요 작품들의 번역자이자 소설가인 이주혜의 최근작이다. “‘나’의 쓰기가 스스로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인의 다면성을 서술하는 일로도 이어진다”<sup>23)</sup>는 평가처럼 이 소설은 일종의 자기 서사를 표방하지만 결국은 ‘나’를 설명할 ‘타인’을 발견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소설은 1980년 5월 광주를 둘러싼 느슨한 기억을 배경으로 삼는 소설인데, 본 발표에서는 그 점은 다소 후경화하고 자기를 서사화하는 장치(일기)에 주목하면서 ‘자기’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소설에서 ‘일기’는 주인공의 과거 시간을 회고하는 동시에, 병증 치유를 위해 활용되는 장치로 놓여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기 관리의 도구로서 권장되고 활용되곤 하는 오늘날 자기 서사 쓰기의 한 양상을 담아있기도 하지만, 소설은 이제까지의 자기 상처와 작별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타자들과 그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체현하며, 일종의 모범적인(?) ‘자기 서사’ 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1) 줄고, 「다차원 트랙의 상상」, 『문화과학』 119, 2024년 가을.

22) 에이드리언 리치의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외 다양한 도서를 번역해 왔고, 소설 『자두』 (2020), 『누의 자리』 (2023),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2023) 등을 썼으며, 소설 『그 고양이의 이름은 길다』 (2022)로 2023년 신동엽 문학상을 받았다.

23) 김다술, 「붉은 언어로부터 무한히 탄생하는 세계」, 『문학동네』 118, 2024년 봄.

소설은 “학살자가 죽은 날, 그의 죽은 몸이 운반된 병원에 갔다.”(8쪽)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학살자’가 누구인지 환기시키려는듯, 소설 곳곳에는 한국의 1979년 겨울에서 1980년 여름 사이를 환유하는 기표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주인공이 병원을 찾은 날과 학살자의 시신이 운반된 날이 일치하는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주인공은 불안, 공황 등의 몸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50대 여성이고, 그 치료를 위해 예약된 날짜에 내원했을 뿐이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은 남편으로 인해 가족이 깨어진 일과 관련된다. 이때 의사는 치료의 한 방편으로 일기 쓰기를 권하고 주인공은 한 글쓰기 교습소의 일기 쓰기 수업에 참여해 일기를 써나가며 타인들과 그것을 공유한다. 소설은, 유년의 회고와 현재 시간이 병치되어 전개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때, 과거의 시간을 담당하는 장치가 주인공의 일기 쓰기라는 점을 먼저 주목해 본다. 소설에서 일기는 직접적으로, 현재의 상처와 몸의 증상에 고통받는 자기를 치유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달리 말해 일기 쓰기는,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자기 병증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관리하도록 하는 실용적 장치로 기능한다. 자기 치유적 글쓰기의 한 방편으로서 일기는 역할한다.

왜 하필 1979년에서 회고가 시작되는지 독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한 시절의 야만과 그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 겪었을 느낌과 감각이 느슨하게 암시될 뿐이다. 또한 소설은 1979년 겨울부터 1980년 초여름 사이의 시간의 강한 상징성을 의식하면서도, 그 시간을 회고하는 것이 지극히 사적일 뿐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가 아님을 서사적으로 역설한다. 그 시간의 풍경은, 개체적 몸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묘사되고, 그것을 의미화할 수 없었을 아이의 시점에서 무심하게, 때로는 암시적으로만 그려질 뿐이다. 예컨대 한국 현대사의 격변(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는 어떤 장면들)은 아이들을 재우고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비밀스러운 분위기로만 감지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 무서움 등으로만 묘사된다. 비상계엄령, 데모 등과 같은 시대어들은 이 소설의 너른 배경을 암시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진술되지 않는다.

서사적으로도 주인공의 어린 시절과 그 사건들은 파편적으로 그려진다. 1980년 주인공은 열살이 되었고, 아버지는 사라진다.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기울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사업(에 비근한 일) 때문임이 암시되지만 정확한 사정은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남자아이로 둔갑된 삶을 사는 주인공은 노래로 인해 기쁘고 들뜨고 상처받는다. 주인공이 왜 남자아이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설은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 독자는 단지, 어른들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취약함과 그에 대한 세상의 압도성(=폭력)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 방을 차지한 남자의 정체도 그러하다. 그는 빛 독축을 하러 온,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장면을 들키며 쫓겨나는 인물이지만, 데모하는 학생들의 풍경이나 그들의 문화 이미지와 뒤섞이며 정체를 판별할 수 없는 윤곽만 남긴다.

일기 속 사건이나 존재는 무엇 하나 명확한 의미를 확정해 주지 않는다. 이 파편적 기억의 나열 속에서 이른바 시대적인 것과 사적인 것들은 주인공에게 썩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

열 살 무렵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랑과 혼욕의 이름으로 오가던 일상적 폭력과 상처, 그리고 어느 날 굳게 닫힌 방송국 철제문 앞에 서 있던 군인과 장갑차를 통과해야 했던 아이의 불안 등은 놀랍도록 이질적이지 않다. 아이들의 탐정 놀이 장면도 그렇다. 아이들 시선에서의 탐정 놀이 속 트랜치코트, 검정 선글라스, 무전기 등은, 시위 진압 현장의 사복 경찰의 모습과 의미상 구별되지 않는다. 모든 기표가 아이의 시점에서 아직 의미화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감각되는 폭력의 기운은, 그 장면 모두의 공통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 같다. 즉, 아이들의 불안, 공포 등은 그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공간의 자장 하에서 모두가 비슷하지만 다르게 경험한 어떤 미시적 사건들임을 추측하게 한다.<sup>24)</sup>

요컨대 소설 속 일기는 사사로운 상처의 기원을 추적하는 장치인 동시에, 그 경험들이 부지불식중 역사 사회적인 자장 하에 놓여 있으리라 암시한다. 하지만 소설은, 이 회고 자체를 과편화한다. 이런 특징은 얼핏, 소설적 개연성의 결함으로 보이게도 한다. 회고되는 시간은 일 년이 채 안 되는 짧고 선적인(linear) 시간이지만, 그 안의 기억은 두서없이 나열되어 있고 하나의 일목요연한 서사로 통합되지 않는다. 진술되는 사건마다의 의미상 공백도 적지 않다. 통상, 회고에 기반한 기존 성장, 기억 서사로부터 정돈된 어떤 주제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시점에서 임의로 재구성, 편집되는 과정을 노련하게 감추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러한 과정을 최대한 회피하고 기억의 과편적 나열 과정을 오히려 노출한다. 의미를 가능케 하는 개연성이나 인과의 고리가 거의 생략된 채 그러저기에, 자연스레 기억 자체의 불완전함, 허약함이 환기된다. 회고에 기반한 기록은 통상 진실을 담보한다고 믿어진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부상하는 것은 오히려 기억은 허약하고 종종 부정교합을 수반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기억의 담지자로서의 자기의 불안정함이다.

주인공이 일기 속 자신을 내내 ‘시옷’이라는 기호로 표기,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도 잠시 환기해 본다. 일기를 쓰는 주인공은 “나는’이라고 시작했더니 한 줄도 쓸 수 없었”(32쪽)다는 이유에서 ‘시옷’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시옷’은 “어쩐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처럼” 생겼다는 이유(33쪽)로 선택되었다고 말한다. ‘나=개인’이라는 함의의 무게와 부적절함을 이 주인공은 지금 알고 있다. 아마도 사람 인(人)의 형상을 염두에 두며 작명한 ‘시옷’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통상 1인칭 개인으로 상정되어 온 ‘자기’ ‘나’의 표상을 이탈하는 기호다. 이것은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기도 하고, 내 안의 셀 수 없는 자아의 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실제 서사는, 자기의 현재 상처를 돌보기 위해 유년의 시간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같은 시간대를 함께 보낸 모든 취약했던 이들을 소환한다. 이것이 ‘나’를 이루는 무수한 타자의 존재를 긍정하는 서사이자, 궁극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되는 자기를 암시하는 주제임은 분명한 것이다.

24) 이런 이유에서 이 소설은 5월 광주 소설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동시에 다른 방식의 5월 광주 소설의 가능성을 상상케 한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개인적인 것’의 의미를 재구축하는 과정, ‘자기’라는 내적 표상이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구축해 가는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어떤 사건에 대한 당사자와 비당사자 문제, 경험 없는 세대의 이른바 ‘포스트 기억 정치’의 문제를 사유할 때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과거와 현재가 ‘일기’를 매개로 만나는 장면(유년의 주인공이 성별이 폭로되면서 노래를 포기해야 하고 선생님의 분노와 배신감을 한몸에 경험하는 1980년 “5월의 한복판” / 그 기록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며 격렬한 울음을 터뜨리는 현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들의 겹침은 어떤 존재 안의 통합되지 않은 여러 자아가 가까스로 마주치며 고유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암시한다. 이질적 시간들이 교섭하다가 어느 순간 오버랩되고 거기서 어떤 신체적 변형(울음)을 이루어내는 이 장면이야말로, 어떤 존재가 독자적인 개체이기 이전에 사실상 이미 그와 늘 연루되어 있는 세계와의 교섭 현장이자 그 효과의 연쇄임을 확인시킨다. 즉, 주인공의 일기 쓰기는 개체적인 몸을 넘는, 혹은 그런 몸으로 분화하기 이전의 미분화(未分化)된, 준안정적(metastable) 세계를 부조해 낸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롯한 자기, 내면 같은 표상이 본래 품고 있었을 모호함과 균열을 암시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자기와 내면을 구성시키는 무수한 연루된 자체를 증거한다. 단일하게 통합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구성하고 있을 무수한 존재와 사건, 시간과 공간적 응성거림을 확인시키는 것이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확인되는 바다.

물론 소설 *끄트머리* ‘작가의 말’에서 작가는 “시옷에게 이름조차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고 “말을 걸고 싶었”고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싶었다.”(347쪽)고 적어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분명 ‘나’ 혹은 어떤 고유명 이전에 ‘시옷’이라는 기호를 선택함으로써, 자기=나를 포함한 존재의 원리를 근원적으로 지시했다. 개체로서의 ‘나’ ‘자기’는 사실상 이러한 연루됨, 얽힘 속 사건, 특이성들의 연쇄적 다양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강조건대 이것은 개체들의 총합이 아니라 어떤 특이성들의 얽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개체들 간의 상호(inter)적인 관계라기보다 식별되지 않는 존재의 내적(intra)으로 얽힌 상태의 이미지를 떠올려도 좋을 것이다.<sup>25)</sup> 이런 맥락에서 이 소설은, 최근 ‘자기 서사’의 응성과 관련한 일종의 픽션적 응답으로 읽을 이유가 충분하다. 글쓰기의 질료의 핵심인 ‘자기’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즉 지금 자기 서사를 표방하는 많은 출판물이 자명한 전제처럼 여기는 ‘자기’를 오히려 메타적으로 질문한다. 또한 자기 서사의 현장과 담론 모두에서 질문되지 않은 나=개인=1인칭 식의 도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만든다. 나아가 이러한 도식적 사유가 잘 작동하지 않는 곤경들 앞에서 이 도식의 역사성(한 시절의 이념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다르게 상상해 볼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 속 언표화된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니까요.”(12쪽)는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소설의 정작 보아야 할 지점을 놓치는 것이다. 이 말은 주인공이 의사 앞에서 직접 발화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떠올리는 말이다. 주인공은 의사의 질문 앞에서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니까요.”(12쪽)라는 말을 삼키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덧

25) 이것은 affect와 신체에 대한 브라이언 마수미의 관점이나, 존재의 양태에 대한 캐런 버라드 등의 intra-action을 염두에 둔 진술이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기계적 분석틀로 삼는 대신, 그 개념어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사유의 틀을 참고하며 이 글의 문제의식을 전개했다.(추후 보강)

불인다. “(이 말을 : 인용자 주) 예전이였다면 단호하게 대답했을 것이다.”라고. 즉, 현재 시점의 주인공에게는 이 말이 과거의 말이다. 현재 시점에서 주인공이 저 말을 삼키는 것은 단지 (진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자각 때문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예전이였다면”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주인공에게는 ‘개인적인 것=정치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적어도 ‘지금 이곳’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가 1970년대 서구 제2의 페미니즘의 물결로부터 유래하여 1990년대 한국어 독자들에게 도래했고, 다시 그것이 2010년대 중반 이래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간을 거치며 다시 소환된 사정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소설 속 주인공은 그것을 ‘다시 정확히’ 소환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주인공의 이 말은 어딘지 현재의 시간과 정확히 들어맞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렇기에 소설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당신의 삶을 써보세요. 쓰면 만나고 만나면 비로소 헤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이 소설의 주제로 읽는 것도 절반의 독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소설적 메시지라기보다 그저 주인공이 매료된 글쓰기 교실의 광고 문구였을 뿐이다. 주인공은 이 문구에 동화되어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도달한 곳은 단지 자기 상처의 치유가 아니라, ‘나’ ‘자기’에 대한 어떤 익숙한 이미지 도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와 세계의 어스름하지만 고유한 윤곽이었다. 소설 속 자기 서사 장치(일기)가 의도한 과거의 상처, 자기 치유란 결국 일종의 결핍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미 연루되어 있는 존재와 사건들을 환기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었다.<sup>26)</sup> 여기에서 다시 임의로 ‘우리’ 같은 말을 떠올리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우리’는 어쩌면 ‘얽힘(entanglement)’의 다른 말이다. 이것은 과거 ‘나/우리’ ‘개인/집단’ 식의 도식과 그 전제로 환원될 수 없는 임의적 명칭이고, 오로지 차이만으로 성립된 개체 단위로 셈할 수 없는 존재 양태의 비의(秘意)를 환기시키는 말인 것이다.

## 5. ‘픽셔널 커먼즈’의 조건과 가능성

(추후 보완)

---

26) 트라우마적 경험은 “주체에게 현재를 해석하는 새로운 행로를 부여하고 주체는 그 행로를 따라 세계를 재구성한다.” (이소, 「테이블 위에서」, 『문장웹진』, 2024.9)라는 견해처럼, 이 소설의 결말은 트라우마적 경험이 다른 세계를 재구성하는 행로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은 ‘주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선결되어야 할 사유의 전제들을 질문하는 셈이므로 이러한 관점은 참조점으로만 남겨둔다.

# 「‘자기’의 재구성과 ‘픽셔널 커먼즈’에 대한 토론문

이소(광주대)

선생님의 발표문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발표문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기 서사’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주혜의 장편소설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을 통해 ‘자기 서사’가 어떻게 ‘근대적 개인’이 아닌 ‘타자적 존재와의 얽힘 속에서 재구성되는 자기’를 발견하는지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픽셔널 커먼즈’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부분 공감하며, 이번 토론을 통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이 주제에 대한 저의 의문을 해소하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소설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은 우울증을 겪는 50대 여성 수윤의 현재와 그녀가 글쓰기 교실에서 쓰기 시작한 1979년 겨울부터 1980년 여름까지의 일기를 오가며 전개됩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 ‘시옷’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이야기는 ‘일기’라기보다 3인칭 시점의 ‘소설’에 가깝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의 클라이막스이자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어린 주인공의 성별이 폭로되며 무대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일기의 클라이막스인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이 같은 시간 광주에서 일어나는 비극과 간접적으로 오버랩되기 때문이고, 소설의 클라이막스인 이유는 현재의 수윤이 글쓰기 교실에서 이 부분을 낭독하다 멈출 수 없는 울음을 터트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장면은 “어떤 존재가 독자적인 개체이기 이전에 사실상 이미 그와 늘 연루되어 있는 세계와의 교섭 현장이자 그 효과의 연쇄임을 확인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소수자의 ‘자기 서사’가 기존의 ‘우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우리’를 상상하게 하는 계기를 품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녀가 온갖 무례와 폭력으로 점철된 야만의 시대를 통과했음을, 비록 비극적인 역사의 무게에 눌러 스스로 지워버린 기억이지만 실은 그렇게 지워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사후적으로 깨닫는 자기 인식의 가치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자기 서사’가 어떤 역사든 자기의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자기 연민의 서사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리라는 의심을 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서사가 변형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역사와 대면한 주인공에게 부채의식과 죄의식을 부과하던 ‘역사적·사회적 트라우마 서사’가 ‘자기 서사’의 작업을 거쳐 ‘나의 트라우마’로 전환되는 다소 나르시시즘적인 과정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서전과 자기기술지의 차이처럼, ‘자기 서사’가 어떤 가능성을 품기 위해서는 자기연민을 발휘하는 대신 잔인할 만큼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동지였으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후 별거 중인 남편, 아빠와만 친근하고 자신에게는 냉정한 페미니스트 딸에 대한 애증은 수윤의 ‘자기 서사’가 주로 젠더적 폭력에 초점을 맞춰 서술되도록 만들고, 이 ‘자기 서사’에서 수윤의 자리를 차지한 ‘시옷’은 언제나 상처받은 아이로 남게 됩니다. 아마도 대학에 들어간 이후 사회 운동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수윤은 자신의 삶을 직접 분석하고 평가하거나 남편이나 딸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시옷’의 이야기를 씁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서사’의 가능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상상계로 회귀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윤에게도 가진 것들과 반성할 것들이 적지 않을 텐데, 그녀는 왜 80년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 시절은 나의 반성이 필요 없는 내 상처의 기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80년 5월은 모든 폭력의 저수지 같은 곳이기 때문일까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많은 이가 타자의 고통을 재현하는 문제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을 지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때때로 그와 같은 태도는 타자와 닿을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반성하기 위함이기 전에 그 무능력에 대한 세련된 알리바이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강의실에서나, SNS에서 제가 목격하게 되는 장면들은, 타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넘어야 할 선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일 때도 있고, 그 선을 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기만하게 계산하는 냉철한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심리상담지, 정신과 차트에 육박할 만큼 상세하게 기술하고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 놀랍기도 합니다. 일견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이 자신을 재현/대의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시대.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재현/대의 체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오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우리’ ‘개인/전체’의 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늘날 ‘재현/대의’의 곤경 위에 ‘자기 서사’의 양가성이 놓여있을 것입니다. 이 곤경에서 유래한 ‘자기 서사’가 다시 새로운 커먼즈를 탄생시킬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면, 어떤 ‘자기 서사’가 어떻게 쓰이고 읽혀야 하는 걸까요.



# ‘광주 비디오(들)’의 정동적 네트워크와

## 비디오 해적질 미학

송은지(중앙대학교)

### 1. 서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전반에 걸쳐 통칭 ‘광주 비디오’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었던 복수의 영상을 중심으로, 광주 비디오의 생산 및 수용의 네트워크와 광주 비디오가 해적질을 통해 초국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미학적 특징들을 정동적 차원에 천착해 논의한다. 이로써 5·18민주화운동 연구와 한국영화사 서술에서 공백으로 남았던 광주 비디오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서울 소재 대학출신 영화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1980년대 비제도권 한국영화사 및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사 서술 작업을 재고하고자 한다.<sup>1)</sup> 국내 언론 보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제작된 광주 비디오는 외신에 보도된 뉴스 영상들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이 비디오테이프를 복사 및 편집해 국내로 반입했거나, 국내에 반입된 외신 보도 영상을 절료로 삼아 편집한 후 유통한 사례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주 비디오들 중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료를 토대로 대중 상영 또는 배포 기록이 확인 가능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1987)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과 5·18관련 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문학, 예술, 종교학 등 광범한 학문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실의 일환으로 2011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중 문서 4,271권, 85만 9백여 페이지의 기록 문서철, 필름 2,017컷, 사진 1,733 등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다만 특기할 만한 사실은 광주 비디오들을 비롯한 당대 보도 영상들이 등재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점이다.<sup>2)</sup> 5·18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비디오테이프를 매개로 1980년대 신군부의 통제와 검열로부터 벗어난 분산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광주 바깥으로 5·18을 알리는 촉매이자 민중적 역량을 지닌 대항 미디어로 작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재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이유는

1) 본 연구에서 ‘광주 비디오’라는 지칭은 ‘1980년대에 국내에서 비디오테이프의 형태로 유통된 다큐멘터리 성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물’로 한정한다. 여기서 TV에서 방영된 방송 다큐멘터리는 제외한다. 다큐멘터리 성격의 광주 비디오와 대별되는 1980년대 5·18 관련 극영화로는 <칸트씨의 발표회>(1987), <황무지>(1989), <오 꿈의 나라>(1989) 등이 있다.

2) 노영기, 『5·18 보도영상자료의 생성과 활용』, 5·18기념재단, 『2022 광주민주포럼』, 2022, 183-184쪽 참조.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유일본이자 원본이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광주 비디오를 비롯한 5·18 영상자료에 대한 수집과 연구가 당면한 동시대적 난점들을 시사한다. 광주 비디오는 1980년 5월 당시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제작된 외신 보도영상을 질료로 삼아 부분적으로 전용(appropriate) 및 복제한 해적판 비디오의 형상을 취하며, 비디오 해적질을 통해 복수의 판본이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1980년대 광주 비디오는 문공부의 음반법과 공연윤리위원회 심의 제도에 따라 불법 영상물로 분류되었고, 배포와 상영이 엄격하게 금지된 이유로 일부 비디오들은 생산 주체와 시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유통되었다. 이러한 원본의 식별 불가능성과 익명성에 기인한 광주 비디오 연구의 난점들은 신군부에 의한 언론 검열과 탄압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지식 생산과 재생산의 조건이 동시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에 더해 2000년대 이후 비디오가 디지털 영상 매체로 급속하게 대체되며 비디오는 ‘죽은 미디어(dead media)’가 되었다는 점 또한 자료의 체계적인 아카이빙과 연구의 난점으로 작동한다.

5·18을 왜곡하는 세력이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한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5·18의 현재성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동시대적 요청하에 5·18 연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5·18 교육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 왔다. 상업영화에서 최초로 5·18을 전면으로 내세운 <꽃잎>(1996)을 시작으로 5·18 영화의 극장 상영이 가능해지자 이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sup>3)</sup> 2000년대에 이르러 역사를 재현하는 매체로서 영상매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 뉴스 보도영상, 방송 다큐멘터리 등 5·18 관련 영상 자료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성과를 보였다.<sup>4)</sup> 이러한 연구에서 5·18 영화는 재현 양상과 기억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5·18 관련 영상 연구는 현장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자 신군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은폐되고 조작된 기록의 공백을 메우는 역사적 보완물로서 영상매체의 증거적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반면 제작자에 의해 원본 보도 영상으로부터 재배열 및 재편집되고, 수차례 복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청각적 오류들로 인해 현장에 대한 지시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저해되는 광주 비디오는, 1980

3) 황혜진, 「『꽃잎』의 맥락, 역사적 사건의 대중문화적 수용」, 『영화연구』, 제14호, 1998; 김종헌, 「기억과 재현의 영상 이미지-5·18 영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제2호, 2003; 박유희, 「망각의 알리바이와 ‘우리들’의 참회 - 광주항쟁 재현의 역사를 통해 본 <택시운전사>」, 『문학들』, 제50호, 2017; 박선웅·김수련, 「5·18 민주화운동의 서사적 재현과 문화적 외상의 한계: 5·18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회학회』, 통권 제25호, 2017; 배주연, 「5·18민주화운동의 영화적 재현 - 광주 비디오를 넘어 다시, 광주로」, 『문학들』, 제59호, 2020; 배주연, 「포스트메모리와 5·18 -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57호, 2020; 주유신, 「기억의 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택시운전사>(2017)와 <1987>(2017)」, 『씨네포럼』 - 제38호, 2021; 강소희, 「5·18 이미지에 대한 응답의 두 방식: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과 <김군>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제90권, 2021; 임경규, 「향수영화와 5·18의 기억: 1980년 광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동서비교문학저널』, 제66호, 2023.

4) 정근식·민형배, 「영상기록으로 본 왜곡과 진실」, 『역사비평』, 통권 제51호, 2000; 정근식, 「항쟁의 기억과 영상적 재현 - 5·18 다큐멘터리의 전개과정-」,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제2호, 2003; 정호기 외, 「영상기록에 담긴 1980년 5월 - 2017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굴 영상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제2호, 2019; 주재원, 「매체 서사로서의 역사와 집합기억의 재현 -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지상파방송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 통권 제71호, 2015; 김정아, 「KBS 다큐멘터리 <영상아카이브 - 오월의 기록>에 담긴 5·18 민주화운동 영상기록물 연구」, 『역사학연구』, 제85권, 2022.

년대에 지녔던 대중적 파급력에 비해 주요한 사료로서 채택되지 못한 채 연구의 공백으로 남았다.

광주 비디오 연구의 공백은 한국영화사연구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기존의 1980년대 비제도권 영화와 독립영화의 범주는 서울 소재 대학 내 영화 씨클을 거점으로 삼아 후세대 영화인들과 친연성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간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계보화되었다.<sup>5)</sup> 반면 광주 비디오는 1980년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형성한 영상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사 서술의 맥락에서 1980년대 이후 비제도권 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기반을 형성한 근간으로서 평가될 뿐, 단일한 영상물로 간주되거나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전사로서 소략하게 언급되는 등 영화 미디어 연구 학계 내에서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호명되지 못했다.<sup>6)</sup> 더불어 극장 개봉 극영화 위주로 전개된 한국영화사 전반의 연구 경향은, 영화의 대중적 수용의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관객성(spectatorship) 형성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비디오 관람 경험에 대한 연구를 공백으로 남겼다. 그 결과 서울 외 지역에서의 비디오를 매개로 전개된 액티비즘, 그리고 행위자로서의 관객들의 네트워크는 영화사의 계보로부터 주변화되었다. 이는 광주 비디오의 제작자들이 스스로 영화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제도권 영화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5·18 연구와 한국영화사 연구 양쪽에서 주변화되었던 광주 비디오를 미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전국적 유포가 가능했던 이유를 미학적, 형식적 차원과 정동적 역량을 중심으로 구체화한다. 1장 서론에서 연구 목표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2장 “광주 비디오(들)’의 생산과 초국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광주 비디오의 복수의 판본이 정치적 국면에 호응하며 상이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양상을 살핀다. 3장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1987)의 비디오 해적질 미학과 정동적 역량’은 1987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작한 광주 비디오를 중심으로 광주 비디오의 해적질이 촉발하는 정동을 미학적, 형식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한국영화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5) 서울영화집단,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학민사, 1983; 서울영화집단, 『영화운동론』, 도서출판 화다, 1985; 서울영상집단, 『변방에서 중심으로』, 시각과언어, 1996; 독립 다큐멘터리 연구모임,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예담, 2003; 이도훈, 『이방인들의 영화』, 갈무리, 2023; 서울 소재 대학의 영화 씨클을 중심으로 활동한 1980년대 비제도권 영화인들의 활동과 그들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지적은 Hieyoon Kim, “Toward a New Cinema: The Seoul Film Collective’s Aesthetic and Political Subversion,” *Celluloid Democracy: Cinema and Politics in Cold War South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23, pp. 92-93 참조.

6) 2010년 박노출의 연구는 기존 영화사 서술 작업에서 반복되었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양식적 기원을 광주 비디오에서 발견하고, 광주 비디오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참조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개별 광주 비디오들에 대한 역사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이유로 일부 오류가 발견되며, 광주 비디오를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 대상으로서 다루는 것이 아닌 전사로 위치시키기 위한 상황적 설명에 그친다는 한계를 지닌다.(Park Nohchul, “Gwangju Video and the Tradition of South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3 No. 2, 2010) 문제는 영화 미디어 연구 영역에서 광주 비디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연구는 박노출의 연구가 유일한 상황에서 김지현, 유운성 등의 후속 연구가 선행 연구에 대한 재검토를 생략한 채 박노출의 문장들을 그대로 번역 및 직접 인용하는 등 선행연구와 동일한 서술상의 오류를 현재까지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지현, 『1980년대 비제도권 영화운동의 이론과 실천-영상 매체의 민주화와(급진적) 재발명-』, 『현대영화연구』, 제14권 제3호, 2018; 유운성, 『1980년대 비제도권 영화의 풍경』, 한국영상자료원 편, 『1980년대 한국영화』, 엘피, 2023.

광주 1980년대 한국 독립영화의 외연을 확장시킬 것을 제언하며 갈무리한다.

## 2. ‘광주 비디오(들)’의 생산과 초국적 네트워크의 형성

1980년 5월 당시 광주를 고립시키고자 했던 계엄 당국의 검열로 인해 광주 지역 모든 방송이 중단되는 5월 20일까지 광주 KBS, MBC, 전일방송, CBS 등은 지방뉴스를 폐지하고 중앙뉴스와 당국의 발표문만을 송출할 수 있었다. 현장에 대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신군부는 1980년 8월 언론인 대량해직과 11월 언론통폐합을 단행하고, 12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며 지속적으로 언론을 탄압했다.<sup>7)</sup> 신군부는 5·18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파할 목적하에 국가 주도로 5·18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국립영화제작소는 5월 29일 <안정만이 살 길이다(대한뉴스 제1284호)>(1980), 6월 3일 <활기 되찾은 광주>(대한뉴스 제1285호)(1980)를 제작하고, 해외 홍보 영화 <광주사태(Rebellion in Kwangju City)>(국립영화제작소, 1980)를 제작했다.<sup>8)</sup>

광주 비디오가 국내에서 대중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2월 1일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광주사태 해결방안 건의를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 민화위는 다섯 편의 광주 비디오 중 세 편을 시청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광주 비디오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sup>9)</sup> 같은 해 11월부터 TV 생중계로 진행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광주 청문회’는 40~5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sup>10)</sup> 앞서 광주 비디오의 존재를 알린 민화위의 종합토론 이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의 기폭제가 되었던 광주 청문회는 청문회 현장에서 광주 비디오를 공개 방영하라는 촉구로 이어지기도 했다.<sup>11)</sup> 이후 1989년 MBC의 <어머니의 노래>와 KBS의 <광주는 말한다> 등 방송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며 5·18 영상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을 배경으로 이전까지 종교 단체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배포되었던 광주 비디오는 유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던 <오월 그날

7) 임현영, 「광주전남 언론사와 언론 탄압의 실태- 518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역사와 책임』, 제5호, 2013, 74쪽-77쪽. 그러나 공식 언론이 아닌 개인이 영상 촬영 장비를 동원해 5월 현장을 기록한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1981년 7월 영화진흥공사가 발행한 1980년도판 『한국영화연감』에 수록된 전국 8mm 소형영화단체 목록에 따르면 당시 광주에 1978년 7월 7일에 설립된 광주소형영화동호회가 있었으며, 회원수는 72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영화진흥공사, 『1980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을지출판사, 1981, 218쪽. 『전남일보』에서 발행한 사진 중심 교양지 『전일그라프』에도 광주소형영화동호회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준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 수는 150여 명에 이르렀으며 매주 무료 강좌를 진행하고 노인당이나 육아원에서 위안회를 개최했다. 한재섭, 「1970년대 광주에서 창작된 소형영화들」, 『진1980』, 제9호, 2022, 66-67쪽.

8) 해외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광주사태>는 가편집 상태로 남아 있으며, 실제 배포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9) 현장에서 상영된 광주 비디오는 <원한의 땅 광주는 고발한다>(조종련, 1980), <광주사태의 전말>(일본한국문제크리 스천긴급회의, 시기미상),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었다. 『민과委, 광주사태비디오 3편관람』, 『조선일보』, 1988. 2. 2, 3면; 『民主·共和현역議員入黨에 喜色』, 『경향신문』, 1988. 2. 2, 3면.

10) 『聽聞會시청률 下向곡선』, 『경향신문』, 1988. 11. 22, 13면.

11) 『學生百여명 平民主黨서 농성』, 『동아일보』, 1988. 11. 15, 15면; 『光州특위 일부 野의원, 平민에 『過熱』 자제 당부』, 『조선일보』, 1988. 11. 23, 3면; 『광주비디오테이프 공개를 진상 모르는 국민 아직 많아』, 『한겨레』, 1988. 11. 26, 7면.

이 다시 오면>은 초기 5천여 개 이상 복사 및 판매된 이후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과 무관 단체들에게 유포되어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제되었다.<sup>12)</sup>

광주 비디오의 유포 범주가 넓어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광주 비디오의 상영 및 유통에 대한 분석과 통제가 요구되었다. 1987년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생산한 자료 「광주사태 비디오 상영확산 차단활동 추진」은 ‘광주사태 비디오’의 급속한 확산세에 따라 ‘가혹한 진압장면’과 ‘보기 흉한 사망자 사진 및 진열된 사체 장면’을 본 대중들이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질 것을 우려하며 대대적인 상영 차단 활동과 압수수색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수록한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1986년까지는 주로 5월 18일을 전후하여 전국 성당을 중심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상영되었으나, 1987년 8월 이후 순회상영이 공개적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확인한 ‘광주사태 관련 불법비디오 테이프’는 3종으로, 구체적인 제명이 언급되는 비디오는 <오 광주!>(1981)이다.<sup>13)</sup> 더불어 1988년 육군본부 민사심리전 참모부가 생산한 「광주사태관련비디오 테이프분석」에 따르면, 1988년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육군 관계자 32명을 동원해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했으며 당시 검토한 비디오테이프는 국내외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포함해 총 11종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1980년대 중후반 국내에 유포된 광주 비디오는 다양한 판본이 존재했는데, 해당 문서는 개별 비디오들의 구체적인 확산 범주와 복제 수량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유포된 비디오로 평가한다.<sup>14)</sup>

신군부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분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항 서사를 구축한 광주 비디오의 전국적 유통은, 비디오 해적질<sup>15)</sup>의 선결 조건으로서 1980년대 한국의 비디오 기반 미디어 인프라 구조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가정용 VCR과 컬러 TV 수상이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영화를 극장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관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비로소 관객은 객석에 앉아 영화를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것을 넘어 비디오테이프를 매개로 영상을 소장하고, 돌려 보는 방식으로 유포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변모했다. 광주 비디오는 이러한 미디어 인프라 구조를 바탕으로 외신 보도영상의 해적판 비디오를 재편집하는 일련의 해적질을 거쳐 제작되었다.

초기 광주 비디오의 생산, 복제, 유통은 해외에서 지속적인 인권 운동과 종교 활동을 전개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전개되었다.<sup>16)</sup> 일례로 1981년 미국에서 제작된 30분 분량

12) 장용주 신부의 구술에 따르면, 초기 7천원 가량에 판매되던 비디오의 복제본이 대인동 터미널에서 2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공개구술아카이브 : 광주비디오의 숨은 제작자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2023, 106쪽.

13)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광주사태 비디오 상영확산 차단활동 추진」, 1987, 10-13쪽.

14) 육군본부, 「광주사태 관련 비디오테이프 분석」, 1988, 1599-1631쪽; 1805-1945쪽.

15) 불법 복제를 의미하는 ‘piracy’와 ‘bootleg’는 모두 ‘해적질’로 번역되나,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해적질은 bootleg에 상응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루카스 힐더브랜드(Lucas Hilderbrand)는 경제적 이윤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복제를 하는 piracy와 미디어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계층에 균등한 수용 경험을 전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ootleg를 구분한다.(Lucas Hilderbrand, *Inherent Vice: Bootleg Histories of Videotape and Copyright*, Duke University Press, 2009, p. 29.) 이러한 구분을 따라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성행했던 상업 극영화에 대한 ‘비디오 해적질(video piracy)’과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액티비즘의 일환으로 전개된 광주 비디오의 ‘비디오 해적질(video bootlegging)’을 구분하며, 후자의 의미에서 해적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 광주 비디오 <오 광주!>는 당시 뉴욕에 거주 중이었던 박상중 목사가 미국 ABC와 CBS, NBC, 독일 NDR, 일본 NHK 등 각지의 내외국인을 통해 방송 보도영상을 녹화한 비디오를 복제한 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던 심재선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했다.<sup>17)</sup> <오 광주!>는 1981년 5월 18일 뉴욕 ‘퍼블릭 스쿨 20’ 강당에서 진행된 ‘광주의거 1주년 추모대회’에서 700여 명의 교민들에게 처음 공개되었다. 개당 50불로 판매된 비디오테이프는 추모대회 이후 1백개가 판매되었으며, 복제를 거쳐 교민들 사이에서 유통되거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통해 국내에 밀반입되기도 했다.<sup>18)</sup>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전국의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대량 복제와 유통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sup>19)</sup>

이처럼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비디오테이프 형식으로 국내에 유통된 다큐멘터리 성격의 광주 비디오는 열 편 내외로 파악된다. 광주 비디오라는 범주의 설정과 구체적인 목록의 수립은 본 연구가 지속적으로 마주할 난점으로, 현재까지는 개념상 혼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난점은 광주 비디오가 유통된 네트워크의 초국적 성격, 그리고 비디오 매체가 지닌 원본의 식별 불가능성에 근간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광주사태의 전망>(일본한국문제크리스천긴급회의, 년도미상)과 같이 문헌자료를 통해 언급되는 영상이더라도 실물 테이프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영상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 둘째, 재일한국민주통이리연합이 일본에서 제작한 <피의 항쟁의 기록>(1980), 재일조선인총연합회가 제작한 <원한의 당 광주는 고발한다>(1980), 도미야마 다에코의 <자유광주>(1981)와 같이 비디오 제작자의 국적이 한국에 국한되지 않다는 점, 셋째, <피의 항쟁의 기록>과 동일한 푸티지에 영문 내레이션을 덧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맥길대학영상>과 같이 원본과 복본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이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교차 검토를 통해 광주 비디오들의 전체 목록을 수립하고 보완하는 것을 후행 연구의 주된 목표로 삼고자 한다.

### 3.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1987)의 비디오 해적질 미학과 정동적 역량

1987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작한 70분 분량의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장용주 신부가 국내에 반입한 독일 ARD의 1980년 9월 방영분 <기로에 선 한국> 테이프 복사본을 중심으로, 일본 NHK, 영국 BBC와 ITN 보도영상, 그리고 정의평

16) 최용주, 『광주항쟁과 초국적 후원 네트워크』, 『한국학』, 제43권 제1호, 2020 참조.

17) 박상중 목사는 광주의 상황이 연일 미국에서 보도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보도가 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비디오 제작에 돌입한다. 박상중, 『박상중 구술채록』,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술테마 컬렉션 민주화와 종교』, 2010. 1. 19.

18) 최시영, 『첫 방영때 교민들 울음바다 5.18 현장 비디오 「OH光州!」 제작한 민승연씨』, 『월간예향』, 1988, 2010 쪽; 『인터뷰 "참상 보고 동포들 울음바다" 미국서광주비디오 만든 민승연씨』, 『한겨레』, 1989. 3. 15, 12면.

19)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전라북도 민주화 운동 협의회, 『80년 5월 광주 학살 사진 전시 및 비디오 방영』, 1987; 천주교행당동교회, 『아, 광주여 무등이여 민족의 십자가여!!! -광주민중항쟁 기록비디오·사진전』, 1987; <오 광주!>의 공식적인 국내 상영 기록은 1985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고려대학교의 석탑 축제에서의 상영으로 확인된다. 『광주항쟁'바로 알고 싶다』, 『한겨레』, 1988. 12. 10, 7면.

화위원회가 추가로 촬영한 영상 푸티지를 더해 제작되었다. 1987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배포된 광주 비디오는 명동성당 청년회에서 배포한 광주 비디오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원한의 땅 광주는 고발한다>(1980), 도미야마 다에코의 <자유광주>(1981)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제작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유통되었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북한이 조작한 영상으로 호도되었다. 이에 공신력 있는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제작되었다. 비디오의 복제는 광주 가톨릭센터 6층에서 진행되었다. 비디오 테크 20개를 구입해 복사를 진행하던 중, 신자들이 가정에서 사용 중이던 비디오 테크 30여 대를 추가로 들여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량 복제를 진행했다.<sup>20)</sup>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더불어 국내에서 유통된 대부분의 광주 비디오는 외신 보도영상을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한 해적판 비디오를 질료로 삼아 제작되었으며, 해적질을 통해 광범위하게 복제 및 배포되었다.<sup>21)</sup> 비디오테이프의 초국적 이동에 따른 출력 방식의 변화와 반복적인 복사 및 복제는 흐릿한 이미지와 탈색된 톤, 화면의 노이즈, 열화된 사운드를 생성한다. 이는 영화가 제작된 열악한 매체 환경을 스크린에 기입하는 동시에,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의 의미 작용과 서사로의 봉합을 방해하고, 정동적 역량을 촉발하는 요소로서 작동한다. 루카스 힐더브랜드(Lucas Hilderbrand)는 비디오테이프가 복제될 때 생성되는 영향들로 인해 비디오테이프 각각은 역사를 포함하는 단독적 텍스트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테이프가 불법으로 복제되고, 유통될 때마다 관객이 참여한 이력이 기록됨으로써 생산되는 미학을 ‘해적판 미학(bootleg aesthetic)’이라고 지칭한다. 복제된 비디오에서 초점이 이탈하고 화면이 흐릿해지는 현상은 테이프의 지리적이고 시간적인 분산을 시사한다.<sup>22)</sup> 비디오는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전자 신호에 기반하기 때문에 동일한 테이프라도 재생될 때마다 상이한 오류들을 드러낸다. 이에 더해 재생과 복제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자 신호가 기입되기도 하는 등 상영이 반복되는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지닌다.<sup>23)</sup>

해적판 비디오의 지리적이고 시간적인 분산과 불법적 유통 경로를 기입하는 물질적 흔적은 광주 비디오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특히나 광주 비디오는 대체로 해적판 비디오를 질료로 삼은

20)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공개구술아카이브 : 광주비디오의 숨은 제작자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2023, 77-79쪽.

21) 포스트식민 국가의 해적 미디어에 관한 연구 중 라비 순다람(Ravi Sundaram)은 텔리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도시의 해적 미디어와 미디어가 유통되는 불법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한다. 순다람은 후기식민국가의 미디어 실천을 ‘해적 모더니티(pirate modernity)’라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비디오와 DVD를 비롯한 해적 미디어는 메이저 스튜디오가 배급 체인과 비디오 유통망을 선점하고 있었던 서구와 달리 포스트식민국가에서는 미디어 수용의 공간과 수용자를 분산시켰고, 더욱 광범한 영향력을 지닌다. Ravi Sundaram, *Pirate Modernity: Delhi's Media Urbanism*, Routledge, 2009, p. 114. 유사한 맥락에서 미디어 해적질을 민족적 미디어 형태로써 지니는 잠재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브라이언 라킨(Brian Larkin)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라킨은 나이지리아에서 미디어 해적질의 역할과 그 잠재성을 논의하며, 식민화 과정에서 도입된 미디어 기술이 국가 통제를 벗어나 변형되는 양상을 설명한다. 그는 나이지리아의 해적 미디어가 나이지리아 비디오 영화 산업과 미디어 인프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적 미디어는 감각적 지각, 시간, 공간, 경제적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조화하며, 나이지리아 관객들이 미국이나 인도의 영화와 거의 동시에 접할 수 있게 만들어 국제 소비 문화에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Brian Larkin, *Signal and Noise: Media, Infrastructure, and Urban Culture in Nigeria*, Duke University Press, 2008, pp. 217-219, p. 225.

22) Lucas Hilderbrand, *op. cit.*, pp. 179-183.

23) *ibid.*, p. 187.



[그림 1]



[그림 2]

해적판 비디오의 형상으로 배포된 이유로, 이러한 해적판 미학이 두 가지 층위에서 이중으로 드러난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사용된 영상 푸티지는 시간적 차원에서 두 가지 층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1980년 5월 당시 현장에서 외신 기자들에 의해 촬영된 외신 보도영상 푸티지이며, 둘째는 1987년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추가로 촬영한 푸티지이다. 외신 보도영상 푸티지 일부는 장용주 신부가 입수한 비디오를 재생한 후, 영상이 송출되는 TV 화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sup>24)</sup> 따라서 정의평화위원회가 촬영한 푸티지와 달리([그림 1]), 외신 보도영상 푸티지는 외곽에 TV 화면의 프레임이 화면 안에 지속적으로 개입된다([그림 2]).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제작되기까지 질료로서 외신 보도영상은 방송 송출용 테이프로부터 보급용 VHS로 복사되고, PAL 방식 인코딩에서 국내용 NTSC 방식으로 변환되며, TV 재생 화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재촬영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생성된 화면을 가로지르는 주사선들 또한 광주 비디오의 지리적 유통 흔적들을 스크린에 기입한다. 더불어 광주 비디오라는 이름으로 개인과 단체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복제되고 확산될 때 형성된 아날로그 비디오의 물리적 손상들과 저해상도 이미지들은 또 다른 층위에서의 해적판 비디오 미학을 생성한다. 이처럼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해적판 미학은 스크린 속 사건 현장들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한 정보들과 개별 사건들의 세부를 탈락시키며, 서사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정동적 영역에서 관객들과의 접촉면을 형성한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운드의 차원에서도 서사화 전략을 저해하고, 정동적 역량을 촉발한다. 외신 보도영상 푸티지들은 현장에서 사용된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부르기)’와 시민들이 촉구하는 구호와 함성을 그대로 전달한다. 더불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대부분의 분량을 독일 ARD의 보도 영상인 <기로에 선 한국> 푸티지로 할애하는 만큼 뉴스 보

24) 당시 영상 편집 경험이 없었던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제작자들은 <기로에 선 한국> 비디오를 카메라로 재촬영할 당시, 독일의 PAL 방식과 한국의 NTSC 방식이 상이해 화면에 검정색 선이 생기는 것을 보고 세운상가에서 NTSC로 변환한 후 편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앞의 책, 110쪽.

도 당시 독일어 음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한국어 내레이션이 독일어 음성에 중첩되어 출력된다. 당시 기술적으로 독일어 음성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언어가 동시에 출력되도록 제작한 것은, 광주 비디오가 북한이 조작한 영상이라는 음모를 피하기 위해 독일 현지에서 방영된 보도영상의 원본을 사용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었다.<sup>25)</sup> 이처럼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서 해적판 비디오 미학은 시각적, 청각적 차원에서 외신 보도영상의 푸티지와 추가로 촬영된 푸티지 사이의 시간적, 언어적, 국가적 간극을 매끈하게 봉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절면을 드러내 원본 영상의 출처를 화면과 사운드에 기입함으로써 지표적 차원에서 비디오의 증거적 지위를 격상시킨다. 그러나 두 가지 언어로 중첩되어 송출되는 내레이션은 관객들로 하여금 독일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내레이션의 차원에서도 설명적 역할을 저해하며, 화면에 대한 해설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의 정동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뉴스릴, 필름 사진, 잡지, 신문 기사, 판화 등 다양한 출처와 매체들이 결합된 ‘파운드 푸티지 필름(found footage film)’의 형식을 취한다. 특히 영상 푸티지 사이에 삽입된 스틸 필름들은 리어카에 실린 시신의 사진, 얼굴이 훼손된 시신들의 사진 등 민중들의 얼굴과 신체 이미지를 가시화하고, 클로즈업을 활용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강력한 정동을 촉발한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외신 보도영상 푸티지와 구분되는 정의평화위원회 촬영 푸티지는 다시 두 가지 층위로 구분된다. 하나는 영화가 제작된 1987년 시점에 촬영된 광주 시내와 망월동 묘역의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잡지와 필름 사진을 촬영한 영상이다. 후자의 이미지들은 1987년에 영화와 동명의 사진전에서 전시된 후 동명의 사진집<sup>26)</sup>에 수록된 사진들 중 훼손된 신체의 사진을 더불어 장용주 신부가 독일에서 수집한 잡지 『퀵(QUICK)』 1980년 6월호와 『슈테른(stern)』 1980년 9월호에 수록된 사진들을 포함한다. 군부 정권의 통제 밖에서 TV로 송출된 외신 보도영상은 국내 언론에서 검열된 정보들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로서 외신 보도영상은 군부 정권의 폭력과 잔혹한 피해 현장의 이미지들을 검열한다. 따라서 외신 보도영상은 필연적으로 민중들의 훼손된 얼굴을 검열하고, 결핍 노출시킨다.<sup>27)</sup> 반면 5·18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시민들과 내신 및 외신 기자들에 의해 촬영된 후 사진집의 형태로 민간 영역에서 복제되고, 유통된 사진들은 신체와 얼굴이 훼손된 시민군들의 사진은 외신 보도영상 푸티지와 함께 배열됨으로써 결핍 노출된 민중의 이미지를 가시화한다.

이러한 민중들의 얼굴과 신체의 이미지는 외신 보도영상 푸티지가 가시화하는 신체의 이미지들

25) 위의 책, 45쪽.

26) 1987년 5월 12일부터 금남로 가톨릭센터에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사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원본 필름을 수집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진행되었다. 전시는 『전남매일』 사진기자였던 나경택이 익명을 요청하며 기증한 다량의 필름을 바탕으로, 익명의 시민들이 두고 간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앞의 책, 17쪽. 같은 해 9월에는 전시에 사용된 사진들과 추가로 수집된 사진을 활용해 동명의 사진집과 비디오가 각각 제작했으며,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사진 일부가 영화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포함되어 있다.

27) 결핍 노출(sous-exposé)은 조르주 디디-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의 개념을 차용했다. 결핍 노출은 일반적으로 사진에서 빛의 노출량의 결핍을 뜻하는 용어이나, 디디-위베르만은 결핍 노출을 과잉 노출(sur-exposé)의 개념함으로써 민중들의 이미지가 흐릿해진 채 가시화되지 못하거나 미디어에 의해 검열되어 가려진 상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민중들의 이미지』, 현실문화, 2023, 18-21쪽.

과 결합되어 정동적 영역에서 ‘정치적 미메시스(political mimesis)’를 촉발한다. 다큐멘터리와 사회적 변화 사이의 관계에 질문을 던지는 제인 게인스(Jane M. Gaines)는 영화의 수용의 차원에 방점을 두며 정치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영화의 역량이 관객의 신체적 감각에 근간한다고 강조한다. 게인스의 정치적 미메시스 개념은 관객들의 신체적 감각을 근간으로 생산되는 스크린 속 신체들의 감정이나 감각에 대한 비자발적 모방을 의미한다. 특히 급진적 다큐멘터리에서 생산되는 정치적 미메시스는 스크린 속 피투성이의 신체들, 신체들이 부딪히고 신체가 덩어리를 이루어 움직이는 장면들, 행진하는 무리들, 성난 경찰들과 같은 투쟁의 이미지가 생성하는 정동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며, 고도로 정치화된 의식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비자발적 측면을 지닌다.<sup>28)</sup> 게인스에 따르면 관객들이 스크린 속 신체들을 따라 신체적 차원에서 정치적 행위를 유발하는 혁명적 영향을 받으므로써 ‘교감적 신체(sympathetic body)’가 생산된다. 급진적 다큐멘터리에서의 방화, 약탈, 행진의 이미지들, 그리고 정치화된 사운드들을 포함해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진 합성들은 관객의 사회적인 행위를 이끌어내고 육감적(visceral) 영향을 형성한다. 다큐멘터리가 정치적 미메시스 역량을 지닌 이미지를 통해 교감적 신체를 생산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발한 사례로서 게인스는 로드니 킹(Rodney Glen King) 비디오를 언급한다. 로드니 킹 비디오는 백인 경찰들의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 현장을 일반 시민이 촬영한 비디오로, 이 영상은 방송사를 통해 전파되어 1991년 LA 폭동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sup>29)</sup>

로라 막스(Laura U. Marks)의 논의는 영화에서의 신체에 대한 강조가 지닌 정동적 역량과 영화적 전략들을 구체화하는 데에 참조점을 제공한다. 막스는 아랍 영화에서의 체화된 전환(embodied turn), 또는 정동적 전환에 주목해 이를 ‘신체의 아랍 영화(Arab cinema of the body)’라고 지칭하며 영화에서 드러나는 신체와 사유의 역량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정동을 촉발하는 비상징적 측면들의 사례로서 몇 가지 영화적 기술들을 언급한다. 첫째는 이동식 스테디 캠의 사용이다. 스테디 캠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관객들이 가까이에서 사건의 흐름 속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 둘째는 촉각적 쇼트(haptic shot)의 사용이다. 클로즈업 장면에서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촉각적 쇼트들은 전영화적(pro-filmic) 사건과 관객 사이의 공간을 채운다. 셋째는 밀도가 높은 몽타주의 사용이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어렵게 만들며, 사운드 또한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강화한다. 이로써 영화는 관객들을 스크린 속 인물들의 체화된 상태를 공유하도록 한다. 넷째는 추상화하는 기술들이다. 비디제시스적인 사운드

28) Jane M. Gaines, "Political Mimesis," *Collecting Visible Evid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pp. 85-92.

29) *ibid.*, pp. 95-98. 로드니 킹 비디오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광주 비디오와 견주어 논의될 수 있는데, 첫째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의 배포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장을 촬영한 푸티지를 길로로 삼은 새로운 형상으로서의 다큐멘터리가 재생산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로드니 킹 비디오는 미디어 인프라 구조의 맥락에서 1990년대 미국에서의 가정용 캠코더의 상용화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항하는 아마추어 게릴라 비디오의 생산이 가능했던 반면, 1980년대 한국은 일반 시민에게 영상 촬영용 장비가 상용화되지 않았던 이유로, 광주 비디오의 길로가 된 푸티지는 처음부터 대항 미디어의 위치에서 일반 시민에 의해 생산된 게릴라 비디오가 아니었으며, 배포 과정에서 대항 미디어로서 변모하게 됐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의 사용은 경험을 강화하며, 밀도 높은 오디오 콜라주에서 디제시스적 사운드는 추상화된다.<sup>30)</sup> 제인 게인스와 로라 막스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민중들의 얼굴과 신체의 이미지를 가시화하고, 비상징적, 비인지적 차원에서 정동을 촉발하는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1980년대 중후반 민주화로 이행하는 정치적 국면에 더해 광주 비디오에 대한 언론의 빈번한 보도를 바탕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운동과 긴밀하게 호응하며 정치적 미메시스와 교감적 신체를 형성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활용된 스틸 이미지는 민중들의 얼굴의 가시화하고 신체 이미지를 통해 정치적 미메시스와 교감적 신체의 생산하는 측면을 더불어 클로즈업의 활용으로 특징지어진다. 클로즈업은 정의평화위원회가 추가로 촬영한 푸티지 중 스틸 이미지를 재촬영한 영상에서 빈번하게 드러난다. 일례로 장용주 신부가 반입한 잡지 『슈테른』을 재촬영한 장면에서 잡지에 수록된 사진은 화면의 좌측 하단에 원본의 기사 텍스트가 드러난 채 지면 그대로 영상 푸티지 중간에 삽입된다.([그림 3]) 이때 카메라는 계엄군이 들고 있는 총을 클로즈업 함으로써 폭력의 이미지가 강화되는데([그림 4]), 이어지는 장면에서 외신 보도영상 푸티지 속 계엄군의 손을 클로즈업 한 장면이 몽타주로 연결되고([그림 5]), 화면의 속도와 사운드가 비정상적으로 늘어지며 독특한 시청각적 효과를 생성한다.



[그림 3]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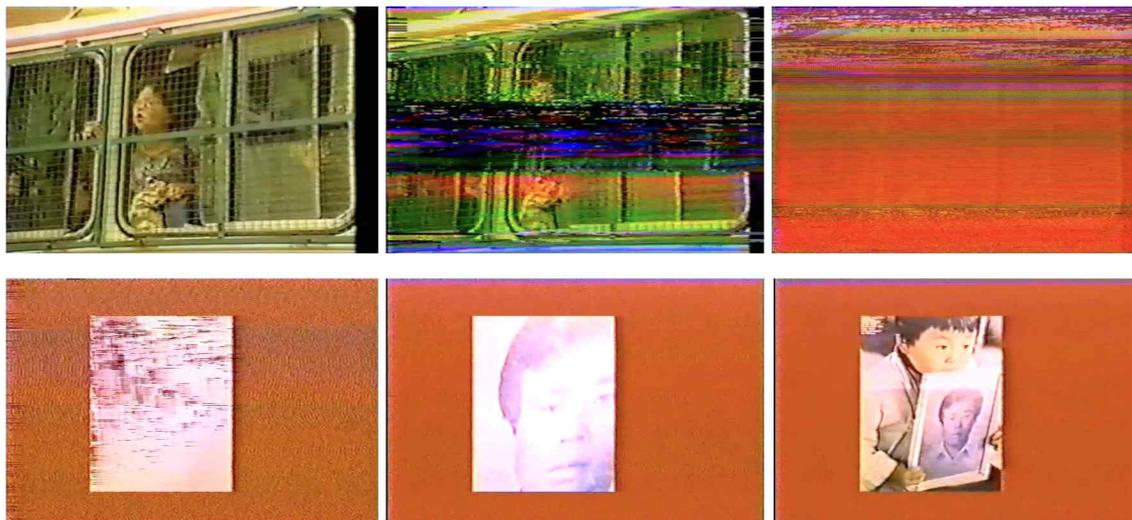
[그림 5]

후반부에 등장하는 또 다른 클로즈업 장면은 파운드 푸티지 영상과 스틸 이미지가 결합되는 단절면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재맥락화한다. 계엄군에 의해 버스로 연행되는 시민을 촬영한 외신 보도영상 푸티지는 빨간색 화면으로 디졸브 되고, 남성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이미지로 이어진다. 그리고 줌 아웃으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통해 이 얼굴은 곧 ‘오월 꼬마 상주’<sup>31)</sup>로 알려진 어린 아이 손에 들린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그림 6]) 이처럼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서 클로즈업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을 시계열적으로 보도하는 원본 외신 영상 속 쇼트들 사이의 틈을 점유하고, 서사적 결합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순수한 정동을 촉발함으로써 이미지를 사건의 시공간적 좌표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시키고,

30) Laura U. Marks, *Hanan AI-Cinema: Affections for the Moving Image*, MIT Press, 2015, pp. 140-141.

31) 오월 꼬마 상주 사진이라는 단일한 텍스트가 정치사회적 국면, 생산 주체에 따라 상이한 로 배치되고 재맥락화되는 영상에 대한 연구는 이서영, 『오월꼬마상주사진』의 사진적 특성과 사회 문화적소통 영상인류학적 접근,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참조.

군부 정권의 폭압과 희생 당한 민중들의 이미지를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실체의 상태로 격상시킨다.<sup>32)</sup>



[그림 6]

#### 4. 결론

본 연구는 광주 비디오 연구가 5·18 연구와 한국영화사연구 양쪽 모두에서 공백으로 남았음을 지적하며, 광주 비디오의 정동적 역량을 중심으로 광주 비디오의 초국적 네트워크와 비디오 해적질의 미학적 차원에 관해 논의했다. 초국적 네트워크를 순환하며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생산, 복제, 유통된 광주 비디오의 정동적 차원에 주목했을 때, 광주 비디오의 광범한 유통은 수용자로 하여금 정치적 미메시스를 촉발했으며, 혁명적 영향을 받은 교감적 신체를 생산했을 것이다. 광주 비디오의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탐구하는 본 연구를 통해 1980년 5·18과 1987년 6월 항쟁 사이를 정동적 영역에서 연결짓는 논의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2) 질 들뢰즈, 『시네마 1 운동-이미지』, 유진상 역, 시각과 언어, 2002, 182-184쪽 참조.

## 참고 문헌

- 『광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월간예향』, 『조선일보』 『한겨레』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비디오의 숨은 제작자들: 김양래·임무택 구술채록집』, 광주영화영상인연대, 2023.
-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광주사태 비디오 상영확산 차단활동 추진」, 1987.
- 김지현, 「1980년대 비제도권 영화운동의 이론과 실천-영상 매체의 민주화와 (급진적) 재발명-」, 『현대영화연구』, 제14권 제3호, 2018
- 노영기, 「5·18 보도영상자료의 생성과 활용」, 5·18기념재단, 『2022 광주민주포럼』, 2022.
- 독립 다큐멘터리 연구모임,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예담, 2003.
- 박상중, 「박상중 구술채록」,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술테마 컬렉션 민주화와 종교』, 2010. 1. 19.
- 서울영상집단, 『변방에서 중심으로』, 시각과언어, 1996.
- 서울영화집단,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학민사, 1983.
- 서울영화집단, 『영화운동론』, 도서출판 화다, 1985.
- 영화진흥공사, 『1980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을지출판사, 1981.
- 유운성, 「1980년대 비제도권 영화의 풍경」, 한국영상자료원 편, 『1980년대 한국영화』, 앨피, 2023.
- 육군본부, 「광주사태 관련 비디오테입 분석」, 1988.
- 이서영, 『오월꼬마상주사진'의 사진적 특성과 사회 문화적소통 영상인류학적 접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임현영, 「광주-전남 언론사와 언론 탄압의 실태- 518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역사와 책임』, 제5호, 2013.
-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민중들의 이미지』, 여문주 역, 현실문화A, 2023.
- 질 들뢰즈, 『시네마 1 운동-이미지』, 유진상 역, 시각과 언어, 2002.
- 최용주, 「광주항쟁과 초국적 후원 네트워크」, 『한국학』, 제43권 제1호, 2020.
- 한재섭, 「1970년대 광주에서 창작된 소형영화들」, 『썬1980』, 제9호, 2022.
- Brian Larkin, *Signal and Noise: Media, Infrastructure, and Urban Culture in Nigeria*, Duke University Press, 2008.
- Hieyoon Kim, *Celluloid Democracy: Cinema and Politics in Cold War South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23.
- Jane M. Gaines, "Political Mimesis," *Collecting Visible Evid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Laura U. Marks, *Hanan AI-Cinema: Affections for the Moving Image*, MIT Press, 2015.

Lucas Hilderbrand, *Inherent Vice: Bootleg Histories of Videotape and Copyright*, Duke University Press, 2009.

Park Nohchool, "Gwangju Video and the Tradition of South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3 No. 2, 2010.

Ravi Sundaram, *Pirate Modernity: Delhi's Media Urbanism*, Routledge, 2009.

# 「'광주 비디오(들)'의 정동적 네트워크와 비디오 해적질 미학」에 대한 토론문

김지하(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본 발표문은 기존의 5.18 연구와 한국영화사 연구 양쪽에서 주변화되었던 광주 비디오를 일명 '해적질'이라고 하는 의미와 유포 과정을 통해 정동적 차원에서의 미학적, 형식적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도 강조했듯이, 광주 '비디오'의 수집과 연구의 난점들, 이로 인한 문화사, 영화사적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동감하고 어설피게나마 경험한 입장에서 본 연구의 선편을 잡고 진행하시는 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제문에 인용, 첨언한 자료들과 해제들은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발표자의 향후 이어나갈 연구가 매우 기다려지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미리 발표자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 연구를 논의하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발표문을 읽고 저의 간단한 제언과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루카스 힐더브랜드'가 구분한 '복제' 용어와 함께 '비디오 해적질'을 차용한 부분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루카스가 언급한 해적판 미학에서의 비디오테이프의 요소들과 그에 따른 불완전성은 초창기 비디오아트가 '아트'로 거듭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본 발표문에서는 파운드푸티지 형식 안에서 광주 비디오의 영화적 가능성들을 탐구하고 있으나, (고다르도 언급했듯이) 비디오도 영화의 역사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액티비즘 비디오아트가 보여준 정치적, 미학적 전략들이 프레임 분석에서도 제시해볼 수 있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2. 발표자께서는 한국영화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한국 독립영화의 외연을 '광주 비디오'와 함께 확장시킬 것을 제언하셨습니다. '광주 비디오'의 제작에서부터 다량복제, 배급, 공동체 상영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1980년대 이후의 노동영화, 대학영화 등 대안적 영화운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럼에도 영화사 안에 재편되기 어려운 한계들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발제문에서도 제언과 지금까지의 한계들은 언급하고 있으나, '광주 비디오'가 '영화' 역사 안에서 왜, 어떤 위치로 서술되어야 할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3. 발표문 4면의 각주에서 박노출의 연구에 대한 한계와 이후 후속 연구에서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광주 비디오를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 대상이 아닌 상황적 설명 안에서 언급한 부분은 앞선 2번 질의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지적하신 선행 연구들의 아쉬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후행 연구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광주 비디오들의 목록 수집 및 보완 작업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가 후속 연구나 기타 관련 작업 등에 많은 영감이 될 수 있을 거라 미리 기대하며 어려운 과정을 앞서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